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 48 回

第 2 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1995年 11月 29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4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2次本會議

1. 市政에 관한 質問

附議된 案件

1. 市政에 관한 質問(李源玉, 金成九, 朴幸子, 李丙贊, 金學元)..... 1 面
2. 市政 質問에 대한 答辯
가. 大田廣域市長(洪善基)..... 24 面
나. 關係室・局長 54 面
3. 市政에 관한 補充 質問(李源玉, 金成九, 李丙贊)..... 65 面
4. 補充 質問에 대한 答辯 69 面

(10시 3분 개의)

○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제2대 의원으로서 시정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시정의 중요사항이므로 보다 확고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원옥, 김성구, 박행자, 이병찬, 김학원)

(10시 4분)

○議長 李起雄 그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모두 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 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 분 간, 보충질문은 10 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 규정에 의한 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이원옥의원, 김성구의원, 박행자의원, 이병찬의원, 김학원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옥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議員 대덕구 제2선거구 이원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지난 선거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지해 준 대전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되새기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바쁘신데도 시정질문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자리는 125만 대전시민을 위해 지난 시정을 낱알이 더듬어 그 명암을 확연히 하고 그것을 거울삼아 내년의 대전을 알차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식하에 민선시대 출범이후 지금까지의 행정실적은 물론 내년도의 시정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느낀 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27 선거에서 홍시장님은 오랜 공직생활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 125만 대전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영광스러운 초대 민선 대전시장에 취임하시게 되었고, 시민들의 그런 높은 기대감에 부응하시기 위해 지난 7월 1일의 취임사를 통하여 우리 대전을 “활기 넘치고 잘 사는 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자연과 어울리는 깨끗한 도시 그리고 자활능력을 갖춘 자치도시”로 만들겠다고 자신있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정말로 대전시민이 모두 바라는 멋진 선언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 반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을 비롯한 누구도 시장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대전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지만 대전에 대한 몇 가지 언명들을 살펴보면 전국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도시, 콘크리트에 파묻힌 회색도시 공단면적이 전국 공단 면적의 1%에 불과한 완전 소비도시 등이 우리 대전을 나타내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민선 출범 5개월에 불과한 이 시점에서 시정 전반적인 면에 모두 매스를 댄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드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시장께서 신속하고 내용있게 대처하시고 시민들의 자조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난 11월 20일 제 48회 정기회 시정연설을 통해 잘 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을 건설하기 위해 6개 분야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전과 정책대안이 대전의 내일을 보다 밝게 조명해 줄 것을 기대하

며 각 분야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대전을 활력있고 잘사는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것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련한 몇 가지 시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문을 통하여 제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제4공단 용지분양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에 관하여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은 넓은 공간과 훌륭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면에서 제조업이 15.9%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국공단면적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 역대 대전시장으로 취임하신 모든 분들이 모두 제조업의 확충과 공단면적의 증대의 길을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진척이 지지부진하다는 점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금년에 전개할 기업유치활동 내용과 그 내용이 종래와 다른 점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난 10월 28일 현안사업보고회에서 공단용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주거용지와 상업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셨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주거와 상업용지의 확대 조치는 공단면적을 잠식시키는 처사인

데다가 분양이 잘 안되니까 싼값으로라도 공장을 입주시키겠다는 아주 안일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재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지내의 토지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4공단 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을미기방죽에 매장되어 있는 30여만 톤의 쓰레기를 언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언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공단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대덕연구단지내에 중소기업종합센타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산·학·연·관의 유기적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단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단지내에 건립할 중소기업종합센타는 이전까지의 활용방안과 어떻게 다른지 또,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의 금년도 설립계획에 관한 현재의 추진상황, 향후 운영계획, 재원조달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물가의 안정기조를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물가상승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써 발생하는 것인이라 우리 대전이 전국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

전과 동일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논산, 금산, 옥천, 공주 등을 포함한 광역생활권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서비스요금 단속에 치중하는 소극적인 물가대책보다는 근원적인 공급확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물품의 가격인하를 위해 물품이 서울로 집중되었다가 지방으로 재분배되는 유통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물품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계획중인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과 한발종합유통단지조성 사업의 규모와 위치 그리고 재원 대책과 규모 완공시기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체행정과 자족능력의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의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과 기구, 소요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책임있고 효율적인 행정수행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시장께서는 현재의 조직으로 인력이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건설교통국이 과다한 조직으로 판단되고,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심히 불균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감하고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시장님께서 자치비용을 스스로 충당하는 자족능력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 금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6대 광역시중 최하위인 75.5%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 구의 경우에는 30%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있어서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신규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은 동시책에 대한 금년도의 실적이 겨우 시 전체 예산 약 1조원의 0.4%에 불과한 47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 총 수익계획중 공유재산 임대분을 공제하면 20억원에 불과하고 또한 공기업인 한발개발공사를 전문화하여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95년도 수지전망을 보면 실질자본금 1,192억원의 1.8%에 해당하는 21억원의 이윤이 예상되어 자본금 이자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특별회계인 지역 개발기금이 898억원이나 있으면서도 연리 8%의 지역개발기금보다 이자율이 1.25%나 높은 충청은행에서 500억원 씩이나 고리로 기채한 것이 올바른 기업운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96년도 예산안심의 부속서류를 보면 일반회계 총 20개 기금총액이 '95년도말에는 566억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96년말 예상액은 이보다 231억이나 늘어난 798억으로 예상되어 있음은 기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기금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이러한 데도 시장께서는 어떠한 묘책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 자치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현실적인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설치조례와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순세계잉여금의 각 10%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 '94년도에는 3.3%, '95년도에는 0.8%만을 후자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1.8%만을 적립하는 등 조례를 많이 위반하고 있으며 각종 조례상의 위헌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부시장인지, 정무부시장인지가 구별되어 있지 않는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허점 투성이인 조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서는 기존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조례에 대한 위반사항을 바로 잡아 주시고 현실과 괴리된 조례는 과감하게 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기능도시를 건설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서남부 생활권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약 770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의 개발을 위한 2조 8,000억원 가량의 예상자금의 조달방안과 개발시기와 방법도 밝혀주시고 둘째, 「엑스포」와 둔산지역 개발로 인하여 상당히 투자가 이루어진 서부에 비하여 동부, 중구 일부 지역의 달동네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오래 전부터 제기되던 역세권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고속철도, 도시철도역사, 대전역사 재건축 및 지하도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중 개발이익금 3,141억원의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 확고하게 밝혀주시고, 언제부터 착공하여 언제 완공

할 지에 대한 의지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형사고의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95년도 사무감사 기획관리실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831개소를 점검하여 불안전시설 94개소중 84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5개소는 정비중에 있고, 5개소를 향후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험시설을 점검한 인력이 첨단장비와 전문가가 완전히 배제된 115명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바 본 의원은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해 대형건축물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현재 최초의 계획도시라는 둔산 지역에서 시청까지 출근하는데 40분씩이나 걸리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 정부 제3청사, 문예회관, 시청 등 공공기관의 입주와 상업용지에 건축이 완료됐을 경우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관한 교통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환경기준을 설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미 환경문제는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이슈」화 되어 황해의 오염과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미치고 있음을 볼 때, 환경문제를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자유치를 통한 동물원 조성을 말씀

하셨는데 동물원 유치사업은 3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된다고 보문산의 배나무골 5만 7,000평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동안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민자유치에 실패해 온 사항인데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위치와 규모 그리고 유치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쓰레기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금고동쓰레기매립장 공사의 완벽추진과 제4공단 내 소각장 시설등과 함께 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제시하셨는데 현대 행정에서 쓰레기처리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서 매립장 조성사업의 계획에서부터 매립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유성구청에서 30여 억원을 들여서 갑천 고수부지에다 조성한 구민 운동장의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문제에 대한 소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맑은 물의 공급을 위해 양질의 수질을 갖춘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이 완공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 인근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전과 충남 그리고 충북이 연합 구성되어 있는 충청권광역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시고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와도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얼마전에 보

도된 바 있는 대전의 상수원인 옥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일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요.

다음은 나눔과 보람의 복지도시건설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노인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이 넘어섰다고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정에서 소외되어 거리를 배회하는 노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자 대전매일신문에서 대전역광장을 배회하며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매일 국수를 대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노인문제가 이미 우리 행정에서 더 이상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지금 시장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다목적 노인회관과 노인병원, 노인치매병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함과 함께 이분들에 대하여 보다 정성어린 손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는 장애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년 9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8,18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이미 밝히신 장애인종합체육관과 재활체련체육관도 조속히 건립하여 주시고 이에 걸맞는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주시고 장애인의 활동이 편리하도록 맹인용 음향신호기, 횡단턱낮추기, 장애인용경사로 및 화장실, 주차장의 확충에도 적극 힘써 주십시오.

또한, 현재 중앙로 지하상가에 설치된 장애

인 전용리프트도 사용상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대전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인다는 시책은 자치시대에 아주 적합한 시책으로 생각되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연상되지를 전혀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한밭문예회관 건립은 759억원이 투자되는 방대한 사업으로써 시 재정여건상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의 규모, 완공시기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한밭문화제를 전국 규모의 문화제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규모만 확대시키는 것인지 이벤트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기본적인 운영 방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가 지금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중앙 정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이미 공설운동장 객석 증축 설계용역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했을 경우 수지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엑스포와 같이 기채만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며 과정이 민주

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때만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70개의 위원회가 있으나 금년에 한 번도 운영하지 앓은 위원회가 21개나 되고 특히 시장께서 선거기간중 공약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시장공약실천자문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앓은 상황에서 시장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황당합니다.

시장공약실천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의결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여 시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 등을 정함으로써 사전에 시행착오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방대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지 앓을 바에는 차라리 모두 폐지하고 집행기관내에서 모든 시책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너무도 앓픈 부분만 지적한 것은 그만큼 민선시장님께 거는 시민의 기대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드리는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시정연설과 관련하여 지적한 부분은 시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시장님께서 확고한 의지와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는 125만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으로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起雄 이원옥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하셔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議員 서구 6선거구 출신 김성구의원입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초대 민선시장이신 홍선기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초대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면 질문하는 의원의 공염불에 불과할 뿐 시정에 반영된 사항은 극히 미진하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정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문제들을 또 다시 의원들의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시장님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용담댐 건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 피해 극소화대책에 대한 문제는 '91년 제7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거론된 이래 지금 현재까지 대전시의 현안 사업중 가장 다급한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대전의 앞날을 걱정하는 다수의 시민과 지역 언론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정추진의 방향이라 할 수 있는 시정연설 또는 시책구상 업무보고 등 어느 한 군데도 이에 대한 문

제점을 인식하고 접근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면서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 행정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보는 것 같아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담댐 건설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전주권 생활용수와 농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용담댐 건설 계획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청호로 유입되던 금강 물줄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일 135만톤을 전주권으로 돌려가고 대청호 쪽인 댐 하류쪽으로는 4분의 1에 불과한 1일 43만톤을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방침대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댐 하류쪽 대청호로 방류되는 1일 43만톤으로는 하천 유지용수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1일 43만톤으로는 금산, 영동, 옥천 등지에서 유입되는 생활, 축산 오·폐수 등의 오염된 물을 자정정화할 능력마저 잃게 됨으로써 결국 400만 우리 대전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3 급수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 지역 시민들은 물론 언론과 주민환경단체, 시의회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본 용담댐 건설에 따라 대청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홍선기 시장 재임중이시던 '91년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시의회의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끈질기게 노력한 대가로 결국 댐 건설 시공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댐 하류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그 결과가 완성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정작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대전시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지역전문가, 세 분만을 추천한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결과 용역보고서가 나왔는지조차도 시장께서는 취임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나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추천한 세분의 전문가께서 평가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댐 하류 하천유지용수량과 관련한 전주권 용수수요량 책정의 적정성과 용수배분원칙에 관하여 용역을 맡았던 대전지역 원로 전문가 한 분께서는 자기가 왜 이 용역에 참여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본 용담댐 건설 후 1일 135만톤의 물을 전주권으로 돌려가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기 위하여 수자원공사가 추정한 전주권 인구 389만명의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이 지역 환경전문연구소인 배달환경연구소가 통계청 인구증가율에 근거를 두고 산출한 169만명보다 무려 120만명이나 높게 책정해 놓은 전주권 인구추정치를 합리화 시켜주는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자 양심을 가지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용담댐 건설로 금강이 유역변경될 경우 하류수량 감소로 용담댐 하류하천과 대청댐의 저수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용수공급 우선원칙에 따라 용수배분을 전면 재수정하는 방안과 현재 수자원공사가 고집하는 전주권 용수공급 1일 135만톤에 대하여는 댐완공 시점의 전북지역 최소용수량인 1일 30만톤을 보장하고 나머지 용수를 대청호 수위 및 수질보전에 활용하면서 전주권의 필요 용수량 증가에 따른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주권에 용수를 보장한다는 다단계

급수방안으로 댐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수자원 공사에서는 이의 개선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95년 5월 41회 임시회를 통하여 용역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극소화 대책 댐 건설 주체와 정부요구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전시 행정당국에서는 수자원공사와 건설부 그리고 금강환경청에 단 1회 대책을 건의한 정도로 이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대전시의 행정력이 너무나 안일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이 팽배하다는 사실이 있음을 시장께서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담댐 건설이 완공되려면 아직도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대전시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강구대책이 마련된다면 우리 대전 충청권의 유일한 생명수인 대청호를 보다 맑고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대전 충청권의 생명수인 대청호는 머지 않아 장래에 3급수의 호수로 전락하여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위기에까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시장께서 부르짖는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이란 단어

는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이며 대전의 지방자치 원년을 책임지셨던 시장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면서 용담댐 건설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청호 살리기를 시장의 최대 현안문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용역결과 보고서에 지적한 문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대전시에서 독자적으로라도 용담댐 건설로 대청호가 입을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자원공사의 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00만톤이라는 엄청난 물을 만경강으로 그냥 흘러 보낸다는 댐건설의 허구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 국감장에서도 용담댐이 건설된 이후 용수공급단계에서 댐 하류 지역으로 방류하는 유량의 부족으로 대청호의 수질이 악화되어 식수원으로 부적합할 경우 대전 충청권의 식수원도 용담댐에서 보장한다는 약속을 댐 관리규약에 명문화하여야 한다고 촉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가 이 지경이 이르렀는데 시장을 비롯한 대전의 행정관료들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머지 않은 장래에 먹는 물이 송두리째 없어질 위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행태와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쾌적한 대전을 만들고 잘사는 대전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홍선기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시대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자립행정의 길을 열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모든 공직자들께서 우리 지역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때에만 지방자치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금고동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운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행정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의 위생적인 매립을 위하여 대전시는 '93년부터 시비 1,172억원을 투자하여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42만평 규모의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되어 '97년 하반기부터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률에 의하면 쓰레기 수집처리에 대하여는 기초단체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으며 광역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시책등의 추진이나 조정통제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전광역시에서는 기초 단체의 사무와 광역시의 사무를 혼동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의 재원이 풍부해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 대하여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막대한 지방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1,000억에 불과한 가용재원으로는 당면 현안사업해결도 못하는 처지에 놓일 정도로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고동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의 경우도 공사가 완료되는 '97년 하반기 이전에 쓰레기 매립기간 연장방안과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매립장 조성자금 확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체계의 개선과 매립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별도의 독립채산방식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청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장기운영계획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매립기간 연장방안과 채산성이 보장되는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참다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

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재정력의 확충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을 기대하는 시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장선거시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의욕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되면서 특히, 쓰레기 매립장 조성, 지하철 건설, 교통수요의 충당을 위한 도로의 확장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의 투자비용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98년까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가용재원의 50% 정도 해당하는 400억원 정도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등 이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자원배분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현행 대전시의 재정운용실태는 모두가 고정세입에 의한 경직된 세출예산 편성일 뿐이며 그 이외는 고작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의존수입에만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현실과 제도 그리고 행정행태 아래서는 결코 진정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이제는 시장께서 직접 전면에 나서야 할때라고 봅니다.

첫째, 중앙에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는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세입재원이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에서 징수하여 국고로 납입한

후 한푼도 지방비로 받지 못하거나 10%정도만을 징수수수료로 교부받는 과적차량단속 벌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토지초과이득금, 토지개발분담금, 농지와 산림전용부담금, 여권발급 수수료 징수금 등의 전액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전국 15개 시·도와 연계하여 투쟁해야 하며 아울러 지방사무를 처리하면서도 국가로 귀속되는 주택채권을 첨부토록 하는 제도도 지방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상적 업무중심 행정형태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기업가적 정신에 입각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관 공동출자사업 등 제3섹타의 사업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며 이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정력 부족과 대상사업의 한계성, 인적·기술적 전문성 부족으로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한발개발공사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둔산지구 교통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둔산에는 정부종합청사, 시청사 대형청사들의 공사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청사들의 입주도 시작하기 전인 지금도 둔산의 도시계획 잘못으로 인한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며 지금 신축중인 종합청사, 시청사 등의 대형

건물이 완공되는 '97년 이후로는 교통전쟁이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던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이 이곳 둔산 교통문제 해결과 어떻게 연계체제를 이루도록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질문한 사항들이 한날 메아리가 되지 않는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한 시장의 철학이 담긴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행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議員 자민련 비례대표 박행자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원년에 첫번째 여성의원으로 참여하여 시정의 제반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아울러 125만 대전시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대변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홍선기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은 참다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구와 틀을 정비하는 해이고, 내년은 그야말로 위대한 대전시대로 가꾸어 나가야 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을 시정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께 65만 여성을 대표한 여성의

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비록 크지 않은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철저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거쳐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의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소득보장의 개념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소득보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개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물질적, 비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전 다양한 계층에서 사회문제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어느 특정계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 수용위주였던 종래의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급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 본격화된 지방자치제도 아래서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외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제시되어 오고있는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일반국민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 사후 치료적 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로”라는 개념을 도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 대전에 도입하고 더욱 내실화·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사회복지발전 연구위원회”를 시장직속기구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우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사업별로 세부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시달하면 시, 구, 동사무소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이른바 일방적, 수직적 전달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므로써 결국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수혜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민간복지자원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역환경문제입니다.

시세의 확장 및 각종 개발사업, 인구 및 차량의 증가등으로 환경오염원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 증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에 이어 그린라운드 협약이 거론되는 등 이제는 환경문제가 국가간 경제무역의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전을 21세기 환경보전형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의 관리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생태도시 대전의 모델을 개발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차제에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으로 채택한 “의제21”의 28장에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96년 말까지 주민,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과 협의하여 ‘지방정부의제 21’을 채택하여 UN산하기구인 지속가능개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였으며 이미 선진국의 지방정부들은 이 ‘지방의제 21’을 수립중에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기도 안산시에서 그 초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연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쾌적한 생태도시 대전의 모델을 개발중에 있는 우리 대전에서도 이 “지역의제 21”이 하루빨리 작성된다면 이는 우리 대전·충청지역을 맑고 푸르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지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작업을 민·학·관이 공동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일을 위해서는 민·학·관이 망라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많은 포럼과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대전시전체의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뒷바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민간단체들과 추진중에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격 실시됨에 따라 배출량 자체의 획기적인 감소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의 아낌없는 협조로 쓰레기 배출량이 37%나 감소되고 재활용품 수집량은 76%나 증가하는 등 우리의 청소행정이 선진화하기 위한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는 반짝하던 이 쓰레기 종량제가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과 시민들의 중론인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은 시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수거용 비닐봉투에 관한 문제로 요즘 골목어귀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면 봉투가 찢어져 내용물이 쏟아져 나와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가 투명해서 봉투안의 내용물이 훤히 들여다보이므로 혐오감을 준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시민들이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 팽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봉투의 재질 자체가 썩지 않는 폴리에틸렌이므로 새로운 토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까지 내재해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인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품 수거의 경우 그 수집량은 비약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모아 놓으면 가져간다고 홍보해 놓고 실제

로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을 하면 안가져가는 사례가 많아 마을어귀, 한가한 공터등에는 심지어 한 달 이상씩 쌓아놓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와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그 개선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재활용쓰레기와 조대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문제로 재활용이 전혀 안되거나 재활용을 하자면 재처리하는데 있어서 경제성이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직접처리도 곤란하고 시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종류의 쓰레기로는 비닐코팅된 광고지나 라면봉지류, 계란포장 용기류, 아이스크림 용기류, 각종 스티로폴 용기류, 알미늄 호일, 랩포장지와 처리 곤란한 비닐봉지등이 있으며 이런 쓰레기들은 음식물 찌꺼기 등 일반쓰레기와 함께 일괄적으로 매립하다 보면 그 썩지 않는 특성상 몇십년 이상씩 우리 흙 속에 묻혀 있으면서 토양공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폐기된 가구류와 전자제품 등 조대쓰레기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보는 시간을 이용하여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월에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10대 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는 우리나

라가 이미 중진국에서 선진국의 대열로 접어들기 위하여 도약을 꾀하고 있지만, 여성의 지위와 사회참여부문에서는 세계 116개국중에서 90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마련된 이 10대 과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과제로는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학교급식의 전면적 확대, 여성의 공직 참여비율 제고목표 설정, 대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할당제 도입 등이고 중기과제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제 확립, 여성인력양성체제 확충·개선, 여성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 추진,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의 개선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정책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이를 잘 운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요원한 공염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등에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맞벌이부부 자녀의 82.4%가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을 30%까지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여성들을 보다 나은 정책을 실현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내 여성단체들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들의 이념과 활동방안, 조직체계 및 운영의 원칙과 현안과제들을 연구하여 단체의 총체적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지도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조성중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관계제도와 법규를 정비하여 모든 여성단체들이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할 예정인 대전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는 대전지역 여성문제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며 여성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중을 볼때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연구원과 전문위원의 양과 질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것과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본 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시장과 도지사 직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장과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위원장의 역할을 맡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본 위원회를 시장 직속기구로 하고 시장님이 위원장 역할을 하실 확고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밭문화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전시와 민간단체등을 중심으로 지난 12년간 개최해 온 한밭문화제는 일반적인 행사이벤트와 전통문화행사로 주제와 특성이 없는 형식적인 연례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누차에 걸쳐 받아왔으며, 우리 대전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일반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여 참여도가 낮음으로써 결국은 관제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다수시민의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의 경우 지역특성상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산업과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다고는 할지라도 다행히 엑스포과학공원, 대덕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국내유일의 첨단과학 도시로서의 산업경제를 활성화하고 과학, 문화, 예술을 고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관내의 기술경제인들과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산·학·연이 협동하여 명실상부한 첨단과학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특성없는 한밭문화제를 하루속히 첨단과학기술과 선진 문화예술이 접목되는 하이테크테마파크 형식의 한밭과학축제로 개선하여 지방문화를 육성하고 아울러 대전의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시내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과학축제나 테크노아트 행사등의 “9월 축제”를 제안하고 나섰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21세기의 첨단산업과 유망업종인 영상산업, 멀티미디어 산업, 정보 통신산업, 디자인 산업, 만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과학전, 산업전, 초대전, 공모전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가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전시, 공연시설이 완비된 EXPO과학공원을 중심으로 개최하고 그 명칭도 “한발과학축제”로 개선한다면 어린이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125만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난으로 우리 대전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고 있는 EXPO과학공원의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모든 문제를 9월 축제를 제안한 각 대학교수님들과 EXPO 과학공원 관계자 그리고 현재 한발문화제를 개최해 온 문화예술단체들을 총망라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그들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대전과학문화예술의 승화차원으로 검토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박행자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하신 홍선기 시장님, 박경원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걱정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게 된 점을 본의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노태우씨의 비자금 파문으로 정치계와 경제계는 물론 전사회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으며, 내년도 총선과 맞물려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바로 그답은 오랜 군사정권하의 중앙집권의 잘못

된 정치행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개막된 역사적인 해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잘못된 중앙정치를 씻어내고 발전적인 지방자치제로 민주화, 세계화에 기여하고 대전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의 소신있는 홍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민선시장으로서의 행정철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5년도는 34년만에 선거에 의한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그야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은 의미있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선기 시장께서는 야당후보로 출마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시장에 선출되어 인생의 대부분을 공직에 몸담은 한인간으로서 남다른 감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영광을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시정의 전반에 걸쳐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고 기대하고 주시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시정전반이 꼭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시장께서는 취임한지가 5개월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전에 임명직 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시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충분한 구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선시장 출범 이후 시행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며, 실제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당출신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의 재

정지원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 앞으로 중앙정부의 관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자생적 재정력 강화방안도 밝혀주시고 완전자치제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지방행정의 혁신과 행정의 기업경영원리의 도입 운영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의 일관성 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대폭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대상사업들이 시의 계획아래 초대의회에서 동의된 사업은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해서 추진하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뜻일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시장 취임이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물원 조성, 문예회관 건립, 시청사 건립등의 주요사업이 변경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임시장 재임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음은 물론 시의회에서도 예산지원까지 뒷받침해주었고, 시업무보고시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배경 변경 목적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본의원도 매우 걱정이 된다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홍시장께서는 이 3가지 사업의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이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바 입니다.

셋째로 각종위원회의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

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무려 6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94년과 '95년 2년간의 위원회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95년과 '94년 2년간에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는 것이 민관 공동출자 사업추진위원회등 19개 위원회가 있었으며, '94년에는 기부심사위원회등 21개 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더구나 민선단체장이 출범을 하였음에도 종래 중앙의 지시등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당연히 재검토되어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문가의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행정심판 위원회등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일반적 심사에 의한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기능별·성격별로 통폐합하여 운영한다든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대체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운영면에서 살펴보아도 본 예산에 위원회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운영실적이 없으면 정리추경 예산에 삭감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등의 정비를 촉구하며, 홍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회복지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60년대에

서 80년대까지 30여년간의 개발년대를 통해서 경제개발 최우선정책을 추진한 결과 어느 정도 경제성장은 이룩하였으나 반면 사회적 병리현상도 많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실태를 보면, 겨우 생계구호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컨대 영세민에게는 최저 생계비와 의료보조가 전부였고 각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도 생계비 중심의 지원이 고작이었으며, 노인복지도 일부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과 경로당의 연료비 지원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소득이 10,000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으로 진입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책의 질적양적향상이 긴요한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애자에게는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노인에게도 소득과 연결되는 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영세민에게는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실질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수준에 맞는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도 있으며, 전임시장도 대전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장애자를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여러가지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시장께서는 사회복지시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펴나가실 계획인지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대책,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사회복지시설 대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책에 대해서 소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농촌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전국 6대도시의 하나로서 시행정이 대도시문제 위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자칫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위한 농정행정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전도 8천 가구에 3만3천여명이 농사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나 예산면에서 살펴보면 대도시속의 농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WTO의 출범으로 우리의 농업은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더욱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소극적인 지원으로는 농민의 생활수준을 높여주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며, 소득보장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데는 더욱 미흡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대전의 농민은 대부분 '89년도 직할시 승격당시 편입된 지역이 대부분으로 일반시에서 광역시로 변모한지 7년여가 지났어도 농촌의 실정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홍시장께서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홍시장님 농촌문제는 이제 미온적 대처에서 적극적 대처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WTO 출범으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농산품의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농민의 설자리가 한정된 실정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작목등을 개발하여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책을 강화시키는 것이 외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의 '96년도

예산은 대전시의 일반회계 예산 5,835억원의 0.5%에 불과한 27억원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홍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시에서 농촌에 대한 지원시책과 앞으로 획기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관철추진상황 및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을 만나철생활권으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아래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최근에는 호남고속철도건설을 위한 타당성등의 조사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완료한 상태면서 얼마전에 보도된 언론내용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천안-공주-논산을 잇는 직결노선으로 잠정결정하였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대전경유를 배제한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제성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지역정서를 도외시한 처사로서 졸속과 안목이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판단 강력하게 대처를 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대전 경유 추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 채택 및 발송, 시민단체 대표등과 함께 중앙기관 방문, 대전 호남 향우회를 통한 건의서 발송, 대전시민 홍보활동 전개등 이의 관철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시다만, 호남고속철도는 반드시 대전을 경유해야 할 것이며, 공주-논산을 잇는 호남고속철도는 있을 수도 없고 검토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공감토록하여 해결해야만 될 현안사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차대한 현안 사업에 대하

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이의 관철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일곱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개선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1972년도에 법으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을 별도로 배치하여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전의 경우를 보면 구 대덕구와 유성구의 편입지역은 거의 전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이는 대전전체 면적 539km²의 약 60%에 가까운 316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27.6%, 부산은 38.1%, 인천은 25.7%로 대전이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주민들은 그린벨트라는 용어자체와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인만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협조를 해왔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그린벨트라는 말만 나와도 당해지역 주민들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로 생각하기조차 싫은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모두가 말들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도 내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악법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세계 어느나라에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시되

며, 밥먹듯 법개정을 잘하는 국회에서도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완화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유독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만이 예나 지금이나 별다름없이 지속되고 있는지 자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시다만 현재 유성의 일부지역은 도심속에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또는 집한채를 사이에 두고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도심정비등 개발을 전혀하지 못하고 개인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이러한 사례까지 법적용을 하여 가난한 농민들을 더욱 못살게 하는 것이 정부 당국에서 해야될 일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기까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시장님께서서는 이해를 하시리라 믿으며, 시장님의 판단으로 개정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되면은 관련기관에 개정의 필요성 건의등 다각적인 역량을 발휘하시어 악법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이 과감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부개발권 개발방향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둔산 신도시의 개발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둔산 신都市는 평면적·획일적 개발로 특징이 없는 삭막한 도시로 전락하였으며, 도로망의 비효율적 건설로 교통체증의 극심한 문제를 노출시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둔산 신도시건설은 실패작

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마지막 개발이라는 서남부권 신도시건설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그야말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된 도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보장되는 도시, 환경오염이 없는 도시로 건설할 것을 촉구하면서 홍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전의 발전을 염원하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관심있는 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議員 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학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여건 마련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초대 민선 단체장으로 취임하신 후 분출하는 주민의 욕구수렴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전반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선기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네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급적 네 분 의원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시책개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문제만 간략하게 제기하면서 시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발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지역

인재육성방안 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선진외국에 국비로 유학을 보내 학위를 취득케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지역출신 인재양성은 지방화 시대에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으로 강원도와 이웃 충남도 등에서는 서울에 학사관을 건립하는 등 다각적인 각도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전출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에 대전학사관을 건립하여, 행정·사법고시 준비생들과 서울에 유학중인 대전출신 학생들을 수용하여 그들이 향후 중앙의 정치, 경제, 행정, 언론계 등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전출신의 우수대학 졸업생에게도 시비를 지원하여 해외명문 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그들을 연구직 공무원으로 특채하여 대전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대전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대전발전연구원” 설치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

으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대전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초대 민선시장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전발전의 초석을 다져놓아야 할 중차대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박사급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소지한 인적자원을 확보, 상임연구단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의 발전 계획의 수립과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이 있고 중앙정부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으며 청와대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생활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둔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획단 조직에는 규제완화반, 간접자본반, 중소기업반, 정보화촉진반, 교통문류반 등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 부분에 구조조정지원금이 '95년도보다 20.8%가 증가된 1조 424억에 자금이 있으며 기술개발지원금으로 6,195억 금융지원기금으로 6,100억, 해외시장개척지원금으로 2,171억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중앙의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의 준비와 지방의 국가발전을 위한 계획이 연계가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현재 국가지정인 문류단지를 위해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서 기이 계획을 제출하여 충청남도에 위치를 하느냐, 충청북도에 위치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간 연구를 미리해서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영을 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타 시·도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보완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대전의 종합적이고도 장기발전적 차원의 사업과 시책을 연구할 대전발전연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개편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취임하신 이후 약 5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까지 시 분청 및 사업소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개편안이나 방침 등 정책결정에 대한 투명성이 없이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주인인 시민과 그들을 위해 업무에 전념해야 할 공무원들의 불안감만 증폭 시키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한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견수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장께서도 「세일즈맨」으로 변신하여 지역의 발전과 지역상품의 해외시장개척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전의 경우는 지금까지 자매결연·명예시장 위촉등 순수교류의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35km²의 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4개 사업소에 110명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보문산에 소재한 공원관리사무소 1개소의 41명이 22,661km²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등 행정수요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부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차제에 부녀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개편하는 등 실·과의 명칭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건물 및 공공시설물 건설시 내진설계를 도입하는 문제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진의 피해는 인적·물적으로 그 피해가 막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년 5회 정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중에 있는 둔산의 정부 제3청사도 5.5도까지의 진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에 의해 건축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는 지진의 피해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형건축물 공사시 내진설계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교량, 육교, 지하상가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는 내진설계를 도입하여 대형참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육교와 서대전 육교의 확장문제입니다.

호남선 이설문제는 초대의회 때에도 특위를 구성하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이설대책을 촉구하였고 또한 시장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지역현안의 주요사안인 호남선 철도이설 문

제에 대해서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호남선이 이설이 되지 않는다면은 대전의구도심과 둔산신도심을 연결하는 대전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계룡로의 중간지점에 계룡육교가 4차선임에 기인하여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병목현상이 가장 극심하다는 게 다수시민의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버스전용차선제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인 수침교 개량공사와 도시철도 1호선 즉 지하철 1호선 공사와 병행하여 계룡육교 확장공사도 추진하므로써 이용하는 대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호남선고속철도의 대전경유를 위해 범시민대책기구도 구성하고 의회에서는 특위를 만들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대전시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범시민 대책기구의 노력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 지하철1호선 계획을 변경하여 박정자 구간까지 연결하는 대안마련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이 부진한 문제입니다.

타 광역시에 비하여 대전은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기는 하지만 공원이구로 지정된 면적만 넓을 뿐이고 실제로 개발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20~30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

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천공원의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공원개발이 불가능해 졌으므로 해당구에 관리를 이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녹지기금 확보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심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2년 9월에 시장이 제안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가 시행된지 만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확보액은 75억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쾌적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 안목으로 제안하여 시의회의 승인까지 받아 시행하는 이 조례가 용두사미가 되고 이제 우리 시민모두의 염원인 시청사를 이전하는데 조차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인 바 앞으로의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준비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

가. 대전광역시장(홍선기)

(14시 1분 계속개의)

○議長 李起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이 끝난 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대전광역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원욱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시의원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아주 심도있는 질문과 채찍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질문과 채찍은 민선시장으로서 대전시민의 복지증진과 대전시를 잘 개발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의원들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시정 전반에 걸친 매우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점 챙기지 못한 점 구석구석까지 살피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또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욱의원께서는 일곱 개 분야에 무려 30개 항이 넘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시장의 의지와 또 시장의 신념을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하고 실

무적인 사항은 배석한 시에 간부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공단과 대전과학산업단지조성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의 건립, 한밭유통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경제도시건설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천명을 했고 또 지난번 개최 때에도 내년도 시정연설 하면서 밝혔듯이 이제 우리 대전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정의 우선 과제는 경제기반의 확충입니다.

즉, 잘사는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비슷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광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의 경제적인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또 국민경제에 대한 우리 시의 기여도가 2.4%에 불과할 만큼 우리 시는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산업구조가 과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분야에 설령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높은 복지수준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판단하에 저는 시정의 제1의 과제를 대전시의 경제기반을 확충하는데 두고 이를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해서 앞으로 경제도시를 건설할 생각입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대전에 취약한 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단지공업의 확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업단지 확충입니다.

현재 3, 4공단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4공단의 경우도 국내경기의 침체등으로 인해서 분양이 저조한 편이지만 4공단의 경우 다른 시에 비하면 분양률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 시장 자신이 지난 8월부터 각 그룹

의 책임자들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 중에 매우 밝은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 4공단에 분양이 가속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국내 우수한 반도체 공장이 우리 4공단에 입주할 하기 위해서 현재 시와 저와 직접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분양을 마치고 바로 첨단과학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첨단과학단지의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중소기업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산업구조로 봤을 때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또 경영구조가 매우 열악합니다.

자본의 취약성 기술의 낙후성 정보의 폐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대전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하에 중부권에서 처음으로 연구단지안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구단지 안에 부지를 확보해 놓았고 소요예산도 국비 60억을 포함을 해서 내년도예산에 지방비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3월쯤 착공을 해서 내후년 '97년상반기까지는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생산, 기술, 정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분들에게 창업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소위 산업의 「인큐베이

터」 기능을 도입을 해서 별도로 800여 평의 건물을 부지안에 쳐서 연구단지에서 개발되고 연구되는 기술을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미리 시험을 한 후에 판로가 보장이 된다든지 기술이 보장이 된다든지 또는 수익성이 보장이 될 때에는 바로 현업할 수 있는 소위 산업의 「인큐베이터」 시설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할 기본계획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지원센터 안에는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일 큰 애로가 자금입니다.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도 힘들지만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분들에게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용보증조합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한 20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신용보증조합을 현재 설립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맨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어느 정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읽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대기업인들 또 우리 시가 직접 출연해서 단계적으로 이 신용보증기금을 늘리는 이러한 계획하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명실공히 중소기업을 태동할 때부

터 창업이 되고 경영이 될 때까지 정상화 될 때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지원센터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밭유통단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정책에 가장 큰 과제중에 하나는 생산된 상품을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느냐 생산과 유통 원가를 절감시키면서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아주 최적적인 입지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기능, 교통의 이점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물류단지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한 전문용역기관에 내년 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우리 대전지방에 대규모의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과학단지에 국가공단지정조기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은 이의원에서 생각하신 것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과학산업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성구 관평동 일대 129만평의 부지에 약 5,7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990년부터 9개년에 걸쳐서 개발하고자 추진해 온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획의 범위가 원체 크고 자금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관리하기가 벅차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하에서 그 동안 계속해서 정부에 국가공단으로 지정해서 개발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수용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91년 12월에 당시 제가 시장으로 재직을 할때 입니다만 상공부의 권고를 받아 들여 가지고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막대한 재정을 조달하기가 어렵고 또 현재 원가계산한 것에 의하면 평당 분양 단가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청주의 배, 광주의 거의 배에 가까운 분양가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점은 있습니다만 가격면에서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저희 전임시장들께서 기업인들을 서울로 방문해서 교섭도 했고 또 설명회도 했고 서신도 냈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응해 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몇 개 그룹에서 전체를 한 패키지로 개발해서 분양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정밀분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안될 경우 시가 단계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개발하는 방법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습니다만 역대 양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약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김대통령께도 7월 중에 7월 15일 인가요 시·도지사회의 때 직접 제가 구두로 건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우선은 자체로 개발하는 방법 또 계속해서 정부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방법 또 나름대로 독자적이고 새로운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우회적인 개발을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분양가 인하 문제도 아까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계속해서 검토는 하되 절대적인 공장

면적은 잠식하지 않고 인근 토지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상대적인 이익이 토지분양가를 상계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원옥의원께서는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또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추진과정이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김학원의원께서도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두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직과 인력을 자치행정시대에 맞도록 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부임 초 본인의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임초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대전시의 방만한 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전 직원이 놀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또 업무배분이나 권한과 사무의 배분이 불균형하거나 잘못된 게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고치는 작업을 하자, 또 이제 자치시대인만큼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기능과 사무를 위임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자,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과 사무의 일부를 이제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과감하게 이양을 하자 이러한 조직과 사무와 권한과 공무원의 인력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력조직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또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방침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동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입니다.

관청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을 조정하고 사무와 권한을 재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정의 개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총무처에 행정개혁위원회를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을 모셔놓고 1년, 2년 작업을 해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행정조직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다 미국의 경우 후버위원회, 루즈벨트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행정조직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개편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내달 말까지 어느 정도 시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은 이제 도시행정의 질이 과거의 내무행정으로부터 이제는 환경분야, 교통분야, 경제분야, 복지분야가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다가 중점을 뒀야 되겠다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이 가능한 사업, 민간이거나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도 과감하게 찾아서

위탁시키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하면서 그 동안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이양받을 사무에 대해서 약 70여 가지 종류의 사무를 찾아서 중앙정부에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권한 중에서 구청장에게 이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약 200여 가지를 현재 찾아 가지고 구청에 과감하게 이양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이 권한의 배분 조정, 인력의 조정, 기구의 조정은 우리 행정인으로서 하나의 개혁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장치도 미리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인사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이지 결코 다른데 눈치를 보거나 시장이 소신이 없어서 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욱의원님과 김성구의원님께서는 자주재정력 확보를 걱정하시면서 신규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경영사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발개발공사의 전문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 지방자치의 성공의 전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그중에 하나가 지방재정능력을 갖추는 길입니다.

자족능력을 갖추는 것이 지방자치의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먼저 이 지방재정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해결될 과제입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선 내부적으로,

로, 내부적으로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겠다. 인건비, 수용비 등 각종 경상비, 소모적인 경비, 우리가 조금만 절약하면은 새로운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한다면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생하고 근검하고 절약해서 내부적으로 행정낭비를 줄이면서 두번째로는 새로운 세입원을 찾아야 되겠다. 제일 큰 것은 조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대전시의 누적된 체납세금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체납세금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세의 부과, 징수 전 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산처리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내후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를 내년도에 마련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선량한 시민은 누구도 조세의 불평등 부과가 없도록 또 일단 부과된 세금은 추적해서 전액 징수하는 그러한 부과, 징수 행정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버려진 세원, 탈루된 세원, 음성세원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찾아서 모든 납세의 무자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형평과세가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세행정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외수입, 각종 수수료, 자체 서비스사업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지금 적자 요금을 부과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상수도 수도요금입니다. 이거는 공기업인데 이런 공기업에 대한

요금은 그 원칙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아무리 서비스요금이라 하더라도 적정 대가선은 유지가 되는 선에서 요금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200불, 300불 시절에는 관청이 계속해서 빚을 져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우리 시민소득이 내일 모레면 1만불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 적정 대가선은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에서 빚을 지지 않고 독립채산이 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이런 문제도 아울러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시가 돈을 버는 일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빛개발공사의 경우도 제가 처음에 착상한 사업입니다. 저는 그 사업을 민간인과 경제인과 또 우리 관청이 같이 합작을 하고 협력을 해서 공기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제3섹터 사업의 하나의 대표로 상징적인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개발위원회 기금 조성을 위해서 시장 자신이 거의 매일 각 단체, 협회 임원들을 초청해서 조찬을 제공하고 또 호소를 하고 해서 당시 짧은 기간 동안에 20억 이상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낸 대전의 개발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거 한빛개발공사 전신인 대전개발공사에 출자한 민간 소주주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시에서 직접 출자해서 대전에 대표적인 제3섹터 사업으로 육성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동안 많이 변질이 와보니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한빛개발공사와 같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충을 해서 우리 스스로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벌어서 충당하는 이러한 기업경영을 행정에 도입하면서 문제는 공무원들, 행정의 주체인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자기 일상업무를 통해서 경영행정을 도입해서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기업인이 추구하는 것은 첫째 최대이익의 추구입니다.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기업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라고 한다면 우리 관청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크게 벌지 못하지만 일반 개인 사업을 사기업을 잠식하지 않는 공공성이 큰 이런 사업들을 시가 민간기업과 같이 결합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유치한 단계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자기 직무를 통해서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약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찾아서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결실을 결과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내부적으로 행정낭비를 줄이고 조세행정을 공평하게 하고 전산화하고 세외수입을 현실화시키고 이러한 제3섹터 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한다고 한다면 능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주재정력의 확보는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여기에 덧붙여서 제도적으로 정부당국에서 지방재정을 보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국세이면서도 지방세적인 성격이

강한 전화세라든지 이런 각종 지방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세를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주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주에 우리가 내무부였다가 이런 사항을 종합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력의 확보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재임기간 동안에 전 공무원들이 이 경영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밭개발공사에 있어서도 이제 공기업은 사기업에 대해서 탄력성과 자율성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지도, 감독 또 어떤 제도적인 틀 이런 것 때문에 가장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사장의 경영의지가 행동화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조례, 법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지만 기업으로써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한밭개발공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제도 감사를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지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밭개발공사가 그야말로 우리 대전시의 재정을 위해서 전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직 진단, 경영 진단도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 2월부터는 한밭개발공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 앞에 나설 수 있도록 과감한 개편을 단행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

에서 한밭개발공사의 경영의 탄력성이 최대한도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시에 감독과 지도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원욱의원님과 이병찬의원께서는 서남부 생활권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 재원조달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남부 지역의 700여 만평은 우리 대전시에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젊은 도시답게 미개발의 광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를 21세기의 첨단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남부 생활권은 지금까지의 개발에서 있었던 시행착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커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연과 지역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원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개발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대전시의 인구의 증가, 시세의 확장, 이러한 개발의 전제 여건의 성숙도에 따라서 종합적인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또 그 개발의 방법은 시가 한밭개발공사가 공영개발단을 흡수함으로써 청소업무외에 직접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만 경험과 기술이 아직 축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토지개발공사나 또는 주택공사에 의뢰해서 개발했습니다만, 이제는 한밭개발공사가 직접 나서서 이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자 합니다.

또 이원욱의원님께서도 동구, 중구 일부 지역의 소위 달동네 해소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행정의 요체는 바로 균형개발입니다.

균형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의 이익이 모든 계층에게 고루 균점되게 하므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현대 행정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둔산에는 맨션아파트가 임립하고 있지만, 얼마 들어가서 용두동 뒷골목을 가보면 판자촌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큰 체구가 아닌데 제가 반듯이 서서 걸어가기도 좁은 그러한 좁은 골목에서 사는 분들, 방법등 하나 없고 공중화장실이 모자라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열을 서서 동동거리는 이 처참한 모습을 저는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취임하고 우선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가, 380억이라고 합니다. 200억 이상을 다 구청에다 주면서 이것은 이렇게 아주 절박한 소시민들의 생활편리를 위한 사업에 배정을 해라. 공중화장실, 가로등, 우물, 뒷골목 포장 이런 데에 집중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각에서는 마치 정치인이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선심 행정은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이것 의원님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지역이 의의원 지적대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할 길은 없

고 1차적으로 저는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대전고속전철역이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일대에 역세권 개발이 됩니다.

저의 주장은 대전역으로 인해서 그 동안 개발에 뒤져있던 소제동, 신안동, 정동, 중동, 이 일대에 이 슬럼가를 역세권 개발 사업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 달라, 직접 제가 장관, 교통개발원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현대화하고 나머지 용두동 지역, 대동 산1번지 지역 이런 취약한 저개발 지역은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개발 시책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4년말 현재 통계를 보면 14개 분야에 약 274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했고 또 346호의 불량주택을 개량했고 또 중구 사정동 일대에 사업지구를 철거하고 공동주택과 복지회관 등을 진 이러한 사업을 그 동안에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2동 지구와 중구 부사지구는 1990년도에 사업을 착수했고 금년에는 동구 대2동 지구외에 5개 지구 약 65억을 투자해서 도로개설등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동구 신흥지구 8개 지구에 도로개설과 7개 분야에 약 156억을 의회에다가 현재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 주거개선을 통해서 지역간 균형개발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이원욱의원께서는 역세권 개발의 확실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

했습니다.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구상중인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대전개발에 새로운 전기로 삼고자 합니다.

수 년 전에 동서간 균형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민자역사를 유치해서 동서관통도로 개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그후 고속철도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이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고속전철이 2000년에 개통이 되면 역사가 지어져야 됩니다.

또, 지하역사가 건설되고 지상으로 거기에 대규모 판매시설, 호텔시설, 기타 근린시설 등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로써는 여기에 지나치게 대형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상권이 전부 그리로 흡수되고 보면 기왕 현재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원동시장이라든지 또는 목척교 주변의 상가가 그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 규모로 줄여 달라, 또 그 개발의 범위를, 역세권 개발의 범위를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자기네 땅 철도선이 깔려있는 철도부지, 마치 고구마 모양과 같은 그 지역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시안이었습니다.

저희 시가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이것은 대전시의 새로운 제2발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대전시의 요구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동일부, 소재동, 정동까지 장방형의 모델을 제시하고 현재 건의중에 있고 상당히 저희 시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최종안을 마련한 후에 우리 대전에 와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우리 시의 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또 시민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대전의 논리를 중앙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의원께서는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나, 그 점검에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3년 7월달에 제정된 재난예방 수습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이 있습니다.

이 훈령에 의해서 같은 해 대전광역시 사고예방 수습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했고 또 사고예방대책협의회 그리고 실·국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달에 재난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을 계기로 해서 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의 구축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구인 대전광역시안전대책운영회를 구성을 했고 소방본부에 긴급구조구난본부와 상시 출동태세를 갖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이후에 안전사고에 관한 재인식이 매우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시설물에 관한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또 불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특

히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종합관리 카드를 시설별로 작성을 해서 건축 당시로부터 관리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기록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이런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의원에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술진의 기술수준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분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제2차 안전진단 시에는 국내에 권위있는 그러한 연구기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이원옥의원께서는 환경도시 건설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시면서 환경기본조례의 중요한 내용, 3대 하천의 관리 체계 구축과 생태보존지역조성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행정의 3대 과제가 환경과 교통과 경제행정입니다.

그 중에 저는 이 환경 분야에 시정의 무게를 싣고 우선 자치단체만이라도, 우리 시민이라도 환경조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착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좁은 국토에서 이웃나라 또는 나라 전체의 환경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전시의 독자적인 조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 정부가 시민의 대표들이 만드는 환경관계법 즉 조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시장으로서의 환경에 대한 의지를 시민에게 천명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는 이런 환경조례를 지키도록

환경에 관한 인식과 실천을 재고시키는 그런 두 가지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이 문제는 현재 우리 과장이 직접 외국도 갔다왔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현재 청취중에 있기 때문에 성안이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까, 대전시가 앞으로 2000년대 선진 도시가 되었을 때 가장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화학적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 조례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대 하천의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생태보존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의 3대 하천이라고 하지만 대전천은 우기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유수량이 없기 때문에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유등천과 안양천이 비교적 원류가 길고 또 하폭이 넓고 수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시가 인구 200만 또는 300만을 포용하는 도시가 될 때 천상 갑천과 유등천이 중심하천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하천이라고 하지만 주로 우리는 유등천과 갑천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그런 시책부터 펴야 되지 않겠는가, 저상류로부터 충남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계룡시의 건설 또 논산에 공단조성 이런 것들이 우리 3대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원류부터 우리가 추적을 해서 원천적인 환경오염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역에 생태계보존을 위한 노

력도 같이 기울이면서 대규모의 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다만 중간중간에 보를 증설해서 물이 항상 하천에 있는 그러한 하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3대 하천에 관한 의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구체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생태보존지역도 제가 공약을 한 내용입니다만 도시 속에서 원시림의 정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는가 대전시를 곳곳이 산을 누벼 봐도 보문산에 가도 평일에도 등산객이 붐빍니다.

구봉산도 그렇습니다.

오직 남은 곳이 식장산입니다. 식장산의 비절사 올라가는 그 계곡, 대전에서 가장 오염이 안된 곳이 그곳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환경에 대한 의지지만 일정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는 개발도 제한하고 입산도 통제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식물을 계속 증식을 하고 또 야생동물을 방사하는 등 원시적인 생태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일정한 지역을 시가 생태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환경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자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내년도에 구체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원욱의원께서는 특히 우리 대전 시민들, 어린이들의 가장 기대하는 사업 동물원에 대해서 민자유치방안과 그 동안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동물원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약 350억 5만평 만드는데, 진입

도로 개설비가 거의 버금가는 돈이 드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반면 수익은 거의 없는 사업으로써 그 적자를 시가 감당하기에는 벅잡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민자로 유치하는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은 보문산 공원안에 배나무골 지역에 5만 7,000평 규모로 시비를 투자해서 동물원을 조성하고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에 1,000억, 문예회관 건립하는데 큰 800억 가까운 돈 그 외에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 해결하다 보면 1,000억도 안되는 가용재원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동물원을 시가 직접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순위면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써는 배나무골 인근지역에 약 12만평 규모의 동물원과 도시공원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공원안에는 도시공원법이 허용하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을 같이 유치를 해서 동물원 경영으로 생기는 적자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카바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두 업체가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보고를, 여건이 성숙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 의지는 어찌됐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민자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에 대신합니다.

또한 이원욱의원께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병원, 노인복지회

관 또 치매병원 등의 건립대책 등에 관해서 아주 소상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사회는 바로 노령사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시가 전체인구 130만 중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근 5%에 가깝습니다.

4.78% 입니다. 해마다 늘어요. 이제 머지 않아서 노령화 사회가 됩니다. 이런 노령화 인구에 대한 건강문제, 복지문제, 취업문제, 여가선용문제 이것이 바로 노인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노인회관 지어서 장기바둑 두는 장소 만들어 주고 일부 극히 한정된 노인들이 「게이트볼」과 같은 취미활동을 하고 노인들에게, 무의탁한 노인들에게 교통비, 목욕비 일부 지원해 준, 아까 우리 박행자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전시의 노인정책은 이 네 가지 분야 어떻게 하면 이 분들에게 소외감과 상대적인 고독감을 덜어 주느냐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용돈 조금 주는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작금 젊은 세대들의 그릇된 사고, 그 분들이 그러면 돈이 없어서 역전에 와서 하루종일 느티나무 밑에서 오고가는 사람 쳐다보고 있겠는가?

제가 선거 때 그 분들 하나하나 다 면담을 했습니다. 옥천에서 오는 분, 영동에서 오는 분, 신탄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점심을 굶을 만큼 가난한 노인도 있지만 하루에 2만원씩 며느리한테 용돈 타 가지고 오는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이 뭐냐? 한결같은 소망은 며느리, 손자, 자식들하고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걸 원합니다.

할아버지가 들어가면 구식사람이라고 해서 문닫아 놓고 애기도 안하고 며느리는 아침 먹고 나면 자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 외출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 그런 며느리 눈치보면서 집에 앉았겠느냐 하는 것이 역전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대한 호소였습니다.

먹고살기 어느 정도 좋습니다. 독거노인 물론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 단절감,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이 분들에게 외로움을 덜어 주는데다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뒤야 합니다.

두번째는 어려운 분들, 홀로 사는 노인들, 생계비 없어서 굶는 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도 생계부양수단으로써의 노인복지를 전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여가생활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 이분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취업을 알선하면서 병이 나면 적은 돈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또 노인들이 들기 쉬운 치매병,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갖추는 이런 네 가지 분야에 우리 대전시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복지회관을 장기바둑 두는 복지회관이 아니라 어린애들 직장 젊은 여성들 애도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 물리치료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갖추는 건강교실, 어린이들에게 충효예를 가르칠 수 있는

서예교실, 충효교실 간단히 목욕할 수 있는 목욕시설, 그리고 조그마한 동네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강당시설까지를 포함한 21세기형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1 개소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유성, 동구는 이미 시작을 했고 유성과 서구 등 재정이 확보된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런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면서 치매병원 또 노인병원도 현재 우리 대덕구에다가 짓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의원께서는 문화도시의 건설과 관련해서 대전사랑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먹고 살만하면 갖춰야 될 것은 문화적인 욕구나 갈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도시행정의 큰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문화는 21세기의 주된 사업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전시에 문화행정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화시설,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시민회관을 비롯해서 우송예술회관, 「엑스포 아트홀」 또 대덕 롯데호텔의 「컨벤션 센타」 또 「카이스트」의 공원결코 인구수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없는 문화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 음향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본시설들이 노후하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국제적인 교향악단이나 예술단을 초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의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에 광주비엔날레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보다 인구 2만명이 더 많은 광주인데 이번에 비엔날레 여러분 보셨죠?

대전과 광주 그런 지역개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회관, 오래 전에 계획된 한밭문화회관 금년도 60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780억 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하나의 대전의 상징적인 시설로써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지난 달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고 현재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월달에 아마 우리 의원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상징적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부담없이 교통체증을 느끼지 않고 자기 주거거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중소규모의 문화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300석, 400석 짜리 예술공간이 증설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의 경우 5개 구마다 문화원이 설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문화원을 그 지역의 향토문화센터로 육성하는 방안, 우선 내년도 1개소 터가 확보되는 어느 구에 지원해서 시범적인 그런 문화공간을 건립하면서 앞으로 들어서는 대단위 규모의 빌딩을 허가할 때는 이런 문화공간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시가 권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문화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수준 높은 예술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시립교향악단, 연정국악원,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등 다섯 개의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28억인가 하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립예술단의 정기 또는 부정기 공연을 가보면 단 한번도 넓지 않은 공간이 만원이 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시에 예충산하 각 단체에서 종합예술제를 개최하는데 시민회관, 제가 직접 가 봤어요 전시장에. 수상자와 그 가족 100명 남짓한 관객을 놓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풍토 속에서 문화진흥 안됩니다.

우선 시민들이 고급화된 현대문화를,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 예술인들이 자기의 자질을 개발해서 수준높은 연주활동 수준높은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조장하는데 우리 시의 문화행정에 역점을 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작기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문예진흥기금을 해마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창작 내지는 공연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에 지원을 할 계획을 여러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접입니다. 우수한 예술인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대전 예술단에 몸을 담을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사기와 예술인들의 예술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문제, 많은 관객들이 가서 같이 웃어주고 박수쳐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분위

기 이런 것들은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지는 모든 전 시민들이 같이 분담을 해서 육성해야 될 대전시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문화행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사랑운동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는 바로 애향심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개원 이래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과 서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했지만 오늘처럼 저 방청석에 자리가 가득 메워진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만큼 자치시대에 왜 바쁜 주부들, 시민들이 방청석에 오는가 그것은 대전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전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분야별 의원들의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의원들께서 무엇을 지적하는가 그런 관심 때문에 아마 우리 방청인들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향심,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없이는 지방자치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전북 가면 전북 애향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경남 가면 경남지역사랑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늦었지만 이제 오늘의 대전시민이 모두가 내일의 대전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전에 대한 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보도를 력 하나, 거리질서 하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사회운동을 벌여 보자 하는 것이 대전사랑운동을 제창하게 된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전사랑운동의 내용에는 이

고장 상품을 팔아주자, 내고장상품 비록 경제기반이 취약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나온 상품보다도, 대기업에서 나온 상품보다도 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대전시에 있는 중소기업 상품을 팔아줘서 이 기업이 시민들의 뒷받침에 의해서 성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공사도 법으로 제한되는 것을 제해 놓고는 우리 대전시의 업자들에게 우선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지방의 경제를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우선 관청부터 납품하는 모든 물품들 지역의 물품을 사주자, 대전의 물품을 사 줍시다. 용역 발주도 서울에 있는 전통있는 기관에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단지에 있는 박사들을 적극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운동이 저 밑에 어린애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전’하면 애정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정열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고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 운동에 대한 내용도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안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의원계서는 문화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한밭문예회관의 건립 규모, 완공시기, 한밭문화제 전국 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자상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둔산공원내에 짓게 될 문예회관은 부지가 3만 200여평, 또 건평이 약 1만 2,000평, 사업비가 약 76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약 1,8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공연장, 또 68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과 기타 조명, 음향 등

은 최첨단시설을 고루 갖추게 되며 이미 착공중에 있는 바로 인근에 시립미술관의 전시기능과 같이 연계가 된다면 여기는 명실공히 대전의 문화 1번지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10월 27일에 우리가 조달청에 현재 입찰을 의뢰중에 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4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4년이. 재원이 제대로 조달될 때.

그래서 저희는 재원사정을 고려해서 우선 2001년을 개관 목표로 해서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공기는 단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밭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박행자의원계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문화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8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3번째 연를을 쌓고 있는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특징이 별로 없는 문화제, 또 구청간에 마치 경합이 연출되는 문화제 또 너무 종목이 다양하고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 수 없는 문화제, 너무 평면적인 문화제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제가 직접 거의 전 종목을 빼놓지 않고 현장에 가서 관람도 하고 또 직접 눈으로 지켜봤습니다마는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나, 이제는 광역시라고 하는 대전시 정부만이 갖는 독특한 이미지의 한밭문화제가 개발이 돼야 된다.

대전은, 광주는 천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대전은 부가된 것이 70년도 안됩니다. 한 세기

도 안 되는 대전, 그러나 우리 대전 주변에 많은 문화적인 자취들이 있습니다.

계족산에만 23군데의 성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륙지방에서 처음으로 산서동에, 구완동에 고려청자 도요지가 발견돼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둔산지방에 선사유적지가 발견이 되고 월평산에 청동기시대의 문화유적이 발굴될 만큼 ‘이 지역이 결코 역사가 짧은 도시가 아닙니다.’ 하는 애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의 대전문화가 뭔가, 무엇이 대전문화의 현주소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같이 우리가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대전은 역사가 짧은 대신에 미래가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만의 첨단 두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발해 내는 신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형태의 미래문화를 담은 과학문화, 아까 우리 박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박의원 말씀대로 며칠 전에 대전 시내 각 대학에 산업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이 제 방을 찾아 왔어요. 와서 「테크니컬 아트쇼」를 한번하자, 과학문화제를 한번 하자는 얘기에요. 돈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당장 준비없이 되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내년 한발문화제에 중요한 한 파트로 해 가지고 과거의 문화, 현재의 문화 미래의 문화가 같이 담긴 이 세 가지 주제를 담은 한발문화제로 특정 지어서 개발한다면 자연히 이것은 전국 문화제가 됩니다.

이웃에 백제문화제가 있고 신라문화제가 있지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요. 나는

우리 역사는 짧지만 세 가지 과거문화, 현재의 대전문화, 미래의 과학문화 이것을 엑스포 시설을 같이 이용해서 한다고 한다면 족히 전국적인 문화제로 스스로 발돋움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문화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지금까지 해 왔던 민속문제라든지 이런 작은 분야는 이런 것들은 구청단위로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문화제로 독특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원옥의원께서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유성출신이신 이병찬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가 생기게 된 연유는 주로 군사정부시대에 제일 많이 생겼습니다.

5·16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중지시켜 버리고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여론을 듣는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각 분야별로 도정자문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 구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가 난설이 된 거 기억을 합니다.

이제 전문화시대 또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좀 힘이 겹더라도 담당을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원자력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또는 하수처리문제라든지 이렇게 독특한, 특별한 기술이 고급 기술정보가 필요한 분야는 그 위원회는 계속해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또한 법으로 그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법정위원회 이거는 우선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고려해서 또 현재의 행정여건과 상황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 자치시대에 맞도록 과감하게 존폐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지론입니다.

이번에 행정 우리 개혁작업도 이 분야가 상당히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왜 시장이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약실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은 130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저는 제 공약을 물론 실천합니다. 공인으로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제 자신에 생색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재정을 운영하거나 행정관행과 조류에 어긋나는 공약실천안 할랍니다.

기본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는 그 추진위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걸 보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시장 흥선기가 공약한 사항은 이러 이런데 의원들 여기에는 예산이 확보됐고 안됐고 앞으로의 사업은 시장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만 해 놓으면 될 사업도 있고 방법만 제시하고 끝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먼저 시민에 선출된 시장으로서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는 틀림이 있지만은 내 임기동안에 무리하게 추진해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다만 누가 시장이었을때 대전시에 이

런 현안사업을 착수를 했다. 그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이고 갔다 하는 소리 들으면 저는 만족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실천위원회는 내년 초에 그 동안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의견을 제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성구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 중에서 용담댐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금고동 매립장의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기본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전시에 현안중에서 절실한 현안을 짚어 주셨는데 제가 3년전 '91년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용담댐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그때는 용담댐이 착공이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미 벌써 용담댐은 착공을 해서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담댐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획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용담댐이 대청호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용담댐의 건설로 인해서 소위 그 금강상류의 유수의 자정능력이 소멸되거나 대청호의 담수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해서 대전시를 비롯한 청주시 충청북도 조치원 지금 아산까지 이 물이 갑니다만은 이 충남 경부선 일대에 그 엄청난 용수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시설을 지금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토의 중

합적인 개발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우리 시로서는 이제 용담댐의 건설이 대청댐의 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전제가 충족이 되어 됩니다.

그 동안 시가 안일하거나 무사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소홀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문제 제기가 됩니다. 또 최근의 통보에 의하면 용수조절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대전 우리 시민들이 충청권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이 용수문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연구 노력하겠다고 하는 회신을 받은 방법도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다음에 그 두번째로 금고동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지역에 용지매수를 할 때 여유있게 용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더 깊게 파면 아마 30년 이상도 매립할 수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현재 15년간 매립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추가 확보된 용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차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만 다만 이 금고동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저희가 연구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별도의 독립된 어떤 사업체로 만들어 가지고 독립채산에 의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연구방안을 개선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행자의원께서는 그 사회복지 분야에 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좋

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연구위원회 설치문제 또 탄력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또 민간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주로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 치우쳐서 이 사회복지분야가 아주 극히 단편적으로 단세포적인 그러한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된거 저도 의견을 박의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만불 소득의 중진국가가 된 이상은 이제 복지서비스도 다양화되어야 되고 질도 더 향상돼야 됩니다. 전달체계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높은 종합복지시책이 추진이 되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구도 보건복지부로 바꾼 이유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의 일대 변화의 계기가 왔기 때문에 명칭도 그렇게 바꾸었다고 전 직접 장관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점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대개편을 시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 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 위에서도 언급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대전시의 재정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전문적인 전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것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만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설치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참여 유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제 각 그 오늘 신문에도 그게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재벌그룹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 재투자를 하느냐 문화복지 분야에 어느 기업에서 연간 한 200억 투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적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이렇게 자기가 평생 벌은 돈을 어려운 이웃들 외로운 이웃들에게 문화시설을 해 주고 복지시설해 주고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 성숙되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L·A에 가시면 누구나 다 들리는 「디즈니랜드」 디즈니라고 하는 형제가 자기평생 모은 돈을 재단을 만들어서 기증했습니다.

뉴욕의 세계적인 음악홀 「카네기 홀」 카네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자가 말년에 재단을 만들어서 설립한 겁니다.

이런 복지재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우리의 경우도 지금 대그룹 회사들이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요즈음 그런 복지시설을 각 도시마다 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생각은 우리 박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성숙될 수 있도록 조세면에서 행정면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박의원께서는 우리 시에서 “지역의제 21”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이를 위해서 민·관·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

어떤 민간단체와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그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제 21” 작성을 위해서 민·관·학을 포함한 가칭 시민 환경회의를 조례에 넣기 위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중에 있고 이를 명문화시켜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금년말에 환경부에서 “국가의제 21” 작성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역의제 21” 작성에 관한 지침이 시달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은 이 지침 시달과 관계없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환경조례에 이런 사항을 같이 규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은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그 계획을 검토해서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제 21”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특정한 어떤 민간단체 한 두개만 참여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우리 대전시내에도 현재 배달환경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환경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환경단체를 고루 참여시켜서 가능하면은 많은 다양한 전문적인 의견들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박의원께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여성정책도 이제는 권익의 향상 그 다음에는 복지수준의 제고 이 두가지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 여성관계 평등을 강조하고 규제한 법률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에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직장여성들에게 대해서 일
정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시내 그런 직장 보
육시설 가지고 있는게 딱 저는 한군데 밖
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수당으로 5만원 주고 말아요. 그
래 보험회사 이번 선거기간동안에 다 다녀
보면서 물어보면 젊은 엄마가 하나 안고 하
나 걸리면서 보험설계사로 다니는 모습, 한군
데가 없어요. 이걸 뭐를 의미하는가 이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의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자꾸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감
독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 동
안 좀 미흡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 의
무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
록 계속 우리가 찾아서 독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인
시에서도 우선 대전시청 주변의 직장여성들
을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 볼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맡기고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길러
주는 이 보육시설이 절대 필요한데 이런 문
제는 사회적으로 제기가 안되면서 우선은 이
런 실질적인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성
의 취업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30% 대전시의 지금 6,700여 공무원중에 여
성 공무원들이 20%입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20%.

그러면 프로수를 높이는 것이 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공무원들 공채시험을 보면은 여성
공무원들의 합격률이 자꾸 높습니다. 매년 높
아가요. 최근에는 여성들의 합격률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멀지않아서 대
전 시청도 절반 이상이 여자가 될 시기가 멀
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
다. 여성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에서 차별화 되
고 승진에서 누락이 되고 보직관리에서 한직
으로 돌리고 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발상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자가기 때문에 차등대우를
받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또 그
렇게 그 동안 저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의원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여성들을 위
한 보다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해서 여성단체
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
다.

우리 시에는 여성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여
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이외에도 자생적
인 단체이지만 법정단체 못지 않게 묵묵하게
뒤에서 열심히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각 기능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여성단체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저는 믿
습니다.

시에서 앉아서 여성단체한테 이것 해라 저
것 해라, 청소하러 나와라, 새마을운동 하러
나와라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치시대입
니다.

각종 자치단체가 각종 여성단체가 그 설립

목적대로 설립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정보를 지원해 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러한 여성단체에 대한 정책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움직여서는 안되죠. 주부교실의 설치목적이 다르고, 경실련의 설치목적이 다르고, YMCA, YWCA 설치목적이 각각 다른데 어떤 똑같은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경직된 행정환경의 틀속에다가 각 단체의 독자성이 상실된 채 기능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우리 여성국장보고 늘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독하고 지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독자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라. 앞으로 시비지원도 평면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여성단체다. 좋은 「프로그램」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에다가 보조요청을 하면은 엄격히 심사를 해서 과급효과가 크거나 또는 시나 국가시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제 방침으로 박행자의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같음합니다.

다음에 박의원께서는 대전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천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기구나 시책도 결국 집행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성정책위원회 만큼은 제가 직접 참여해서 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직접 참여해서 이 운영을 지켜 볼 생각입니다.

당초에는 시장 직속으로 여성정책실 같은 것을 생각을 했습시다마는 우선은 우리 여성행정의 현장이 어디냐 보니까 여성회관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노래도 하고 취미도 기르고 하는데 이러한 여성회관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적은 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시라고 하는 자치정부가 입법권을 가지고 기능 행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적은 기능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은 이제 좀 격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 하는 여성정책실과는 근본취지는 같지마는 운영 「패턴」은 아마 독자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전시 여성계를 대표할 수 있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병찬의원께서는 민선 이후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시장의 기본철학이 뭐냐?

또 야당으로써 재정지원등 중앙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자치시대에 살아 남기 위한 혁신적인 과제와 기업경영 원리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시장은 공인입니다. 130만 시민이 저에게 3년간 대

전시정의 책임을 맡겨 줬기 때문에 저는 사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무엇보다도 공인정신에 투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공인정신이 뭐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저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를 연소시킬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멸사봉공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번째는 저는 구시대의 관료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 머리와 제 행태에 많은 경직된 관료적인 의식과 행태가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 지난 4, 5개월 동안 나름대로 많은 갈등을 해 오면서 환골탈퇴하는 그런 아픔을 이겨가면서 제 스스로 변신하는 모습, 자치시대의 시장의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먼저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실천하는데 나름대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다섯 달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시민의 눈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모 방송국에 토론회를 나갔더니 어느 대학에서 ‘민선시장 4 개월’이란 평가 조사를 했는데 현재 시장인 홍선기의 직무수행 능력과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느냐? 대단히 후한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용기를 더해서 공인정신에 가장 투철한 민선시장답게 저 스스로 시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 위에서 저는 우선 지

방의 논리, 대전의 논리를 정립하는데 제 스스로 앞장을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방화시대에 이 대전시라고 하는 시 정부에 책임을 맡겨준 시민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라도 대전의 논리를 가지고 서울의 논리를 제압을 하고 중앙의 논리를 설득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제가 주장하는 대전의 논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한 운동이 바로 대전사랑 운동입니다.

호남고속전철이 왜 대전을 통과해야 되느냐? 호남선이 왜 이설되어야 되느냐? 국가산업공단이 왜 되어야 하느냐? 시장이나 우리 의회, 주민대표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체 시민들이 그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같이 다른 지역사람하고 서울사람하고 건설교통부 직원하고 경제기획원 사람들하고 같은 논리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힘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시정에 현안문제를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바탕위에서 힘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애항심이 그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대전사랑 운동을 제창하는 것입니다.

자기논리 대전의 논리를 강력하게 제가 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셔야 합니다.

세번째, 우리 행정내부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 개발년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숭한 고생을 해왔고 공직자들이 나라를 이만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왔던 것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행정우위의 풍토, 행정만능의 풍토, 주민위에 군림하는 경직된 관료의식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주인이 시민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그러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요구하는 것이 자치행정 시대의 주민의 바람입니다.

이를 수행할 사람은 일차적으로 공직자입니다.

저는 부임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자세 쇄신을 강조해왔고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 시간씩 정신훈화도 했습니다.

조석으로 우리 간부들 여기 다 나와있습시다마는 이제 자치정부의 국장은 중앙정부의 국무위원이요, 장관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장의 명령받고 지시만 따르고 하의상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다 이 애깁니다. 단순한 시장의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청소행정하면은 청소담당국장이, 보사행정하면은 보사담당국장이 바로 대전시라고 하는 작은 정부의 장관입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라, 제가 오늘 우리 간부들에게 제가 모르는 실질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는 실무적인 사항을 우리 국장들보고 답변하라는 뜻도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도의 개혁입니다.

제도를 개혁시키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어떤 제도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이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의 하나가 조례제정권입니다, 국회가 법률 제정권이 있듯이.

그런데 지금의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모법에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니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이러한 제한된 자치입법권.

둘째로 시장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법으로 생각이 되면 당연히 행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시정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직 장관이 선출직 시장·도지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나치게 감독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모든 선진국처럼 행정법원에 제소를 하고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시정이 되면 됩니다.

자치 행정권도 제대로 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

세번째로 자치조직권, 지금 시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전시 행정기구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와 국장의 수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자기 행정의지를 펴는데 조직을 늘리고 줄이고 사람을 늘리고 줄이는 소위 자치조직권이 부분적으로 밖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 또 자주재정권도 아까도 말씀드릴었습니다만 제대로 보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대로 여권발급 수수료 10억에 가까운 돈인데 인건비 일부 남겨놓고 다 가져 갑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시설 시비투자해서 만들어 놓으면 단속은 시산하 공무원이 합니

다.

단속수수료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갑니다.

개발이익금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무리 국가 사무를 지방에서 위임받아 하더라도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다면 50%내지 60%는 지방에 다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한데 이런 것들은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우리가 받을 거 내줄 거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 제도의 개선이 없이 변화를 어떻게 시도하느냐?

행정이 뭘니까, 시장이.

시장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집행하는 것이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은 법대로 평형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이런 제한된 틀 속에서 자치시대의 시장이 그거하나도 해결을 못하는가? 이러한 정책을 한다해도 저는 달게 받지만 현재 아직 우리제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 다리하나 놓고 약속 하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지난 다섯 달 동안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에 시장은 경영행정가가 되어야 된다,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는.

참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 동안 얘기는 안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틈나는 대로 나름대로 사업의 세일즈맨이 이미 된지 오래입니다.

결과를 두고 보실 순 없어도 점차 가시적

으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 사업세일이 무엇이냐, “우리 지방가서 공장 좀 지어달라! 우리지방에 관심을 가져달라! 인연을 맺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직접 실무자도 방문해서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장관도 만나고 부총리도 만나고 대통령도 뵈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행정의지를 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같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대전시의 오늘과 내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들의 힘입니다.

그 힘이 저에게 실어 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가 제 행정적인 민선시장으로서의 행정적인 소신이라는 것을 우리 이병찬의원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일즈맨이 될 것인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 자신이 우선 상품보다도 사업을 팔아서 우리 시에 사업을 하나 민자를 유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의 시애틀 또 헝가리에 부다페스트, 중국에 남경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도 하고 있고 인적교류도 되고 있으나 이제는 폭을 좀 넓혀서 미국 또는 호주, 동남아시아, 구라파에 다양하게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거점을 확보해 놓고 현재 저지난달에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만 대전출신으로서 외국

에 나가 있는 사람중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대전시 명예 외교사절로 임명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저지난달에 그분들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서 좌담회를 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활용을 하고 또 늘려나가는 이런 문제도 하면서 내년 3월에 제자신이 직접 북미주에 한번 갈렵니다.

금년 9월에 상대국하고 약속이 되어있다가 국정감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캐나다 캘거리시와 자매 결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북미주를 일단 다니면서 직접 상담 활동도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외국에 유학가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전체 대전시의 이미지가 우리이웃에 전파되면서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단계적인 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민선 야당시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획득하기 위해서 각 정당은 달리고 있으나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이상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당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역시 국가발전입니다, 선진국 만드는 것.

대전같으면 대전시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어느 정당이나 똑같은 정치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다만 소속 정당이 다르고 일을 추진하는 방법은 다를 망정 당이 야당

이라고 해서 국가시책, 국가의 존망, 안위, 경제문제와 직접 관련된 일에 당이 다르다고 해서 행정가인 시장이 반기를 들 수 없고 역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 행정의 큰 틀 속에서 흐름 속에서 시정과 구정이 같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런 틀 속에서 독자적인 자치행정이 구현되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소신을 갖고 있어서 추호도 야당이기 때문에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직접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협의차 제가 서울을 갔을 때도 각부 장관들 청장들이 전혀 야당시장으로 저를 대해주지 않고 대전민선시장으로 대접을 해 주더라고요.

전혀 차별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통계에 보셨듯이 우리가 걱정했던 「엑스포」 사업을 비롯해서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것이 지하철 빼고도 30억이 더 많습니다. 지하철 예산 200억이 들어간다면 230억이 더 많은 것이지요.

절대 야당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차별화하지 않는다 또 일하는데 불편이 없다 하는 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의원께서는 주요시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특히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시청사건립, 동물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치 시장이 바뀌고서 이런 사업이 다 변질되거나 또는 퇴색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의 가까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저는 평소에 행정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밭개발공사가 제가 3년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은 완전히 변질된 것이라든지 또는 그 외의 사업들이 중간에 중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느끼면서 행정의 일관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부임초에 각 실·국장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토의를 벌였습니다.

우선 시청사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대책이 있느냐? 뚜렷한 재원대책이 없습니다.

그 재원대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00억을 경영사업을 통해서 충당하겠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한밭개발공사가 3년간 일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 한 2억 남짓 순이익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200억을 무슨 사업을 해서 2, 3년 동안에 공기 내에 경영사업을 해서 200억을 벌 수 있겠는가? 막연한 대책입니다.

또 그럼 나머지 800억을 무엇으로 조달할 것인가? 1,000억 가까운 돈인데.

재원대책이 전혀 막연하더라고요.

두번째로 한밭문예회관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760억 들어가는 그 사업 돈 60억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해마다 60억씩 투자한다면 10 몇 년이 걸릴텐데.

그것도 물가 상승되고 하면 계속 단가조정해서 추가부담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앞이 안보여요.

동물원 350억 당장 지을 돈도 없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진입로 개설도 어떻게 할 것인가, 700억이 듭니다.

대전천 상류에 댐을 만들겠다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언젠가는 대전시의 중심하천은 갑천과 유등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장기발전 추세나 대전천이 가지고 있는 소천으로써의 특성이나 활용도나 앞으로 대청댐과 관련해서 제2수원을 만든다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용역비가 조금 아깝더라도 연계를 시켜서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다소 손질하는 듯한 느낌을 줬지만 사실은 하나도 안하는 것 없습니다.

청사 짓습니다. 문예회관 발주했습니다.

동물원 계획대로 내년에 민자유치해서 합니다. 변질된 것이 없어요.

다만, 한밭댐은 다소 생각할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유수량으로 보든지 하폭으로 보든지 앞으로 그 댐이 막았을 때 담수하는 용수량으로 봤을 때 과연 댐으로써 대청댐 보조 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제2 수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종합검토를 할 때는 450억이라는 돈이 아까운 돈이 아닌가 하는 판단하에서 시기를 뒤로 미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기본 제 소신은 방법은 차이가 있을 망정 시민을 위한 사업, 기본적인 현안사업은 기본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병찬의원계서는 사회복지시책 방향과 저소득 계층, 장애인, 노인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또 물어주셨습시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가 사회복지분야 다소 미흡했고 또 복지의 서비스의 질도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저소득계층에는 이제는 생계보장의 차원보다는 생활안정 내지는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전환하면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또 전달체계도 점차 이것을 다원화시키고 또 민간인들이 이 사회복지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병찬의원계서는 호남고속전철 대전경유 관철을 위한 시의 복안과 추진계획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대전시민으로서는 대단히 관심있는 사업이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그렇게 큰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제자신이 떳떳하게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났을 때나 또는 교통연구원의 연구진을 만났을 때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제가 직접 부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또 교통개발연구원팀들을 만나서 왜 대전을 통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누누이 강조를 했습시다마는 일부는 수용을 하고 또 일부는 수용하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어떤 난공사랄지 공사비의 과다 소요라든

지 또한 이제 광주로부터 직접 스트레이트로 서울까지 가는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충남 지역과의 여러 가지 지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아직 전혀 결정된 바가 없고 금년 말까지 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직접 제가 장관한테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대전의 정서를 다시 제가 최근에 전달도 했고 또 헬기로 직접 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우리 시민 모두가 다 대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우리 대전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학원의원계서는 대전학사 건립을 비롯해서 행정조직의 개편 문제, 대전발전연구원의 설치, 호남고속전철 대전 경유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에 충남지사로 있을 때 영재양성을 위한 100억 장학기금 모금을 도민들에게 발표하고 그때 학사건립까지 같이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대전시측하고 도측하고 여러가지 상충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 저도 김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성된 인재가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대전을 향해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고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본 구마모토의 호소가와씨가 맨 먼저 한 것이 소위 동경과 대판에 나가 있는 인재를 구마모토 출신 인재를 어떻게 구마모토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전에, 대전에 좋은 직장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회사가 많이 들어오고 기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대전으로 와야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학금을 들여 가지고 외국유학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의무, 그렇게 되면 이제 의무복무기간을 만들어 주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의무기간만 때우고서만 데로 스카웃당해서 갈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에 많이 나갈만큼 1년에 우리 대전시만 하더라도 약 500명 내지 600명 이상이 외국유학을 간다고 그러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 시민들의 향학열이라고 할지 또는 소득수준이 높아졌는데 나는 이런 장학제도보다는 우리 대전에 보다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고향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문화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 주택문제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되면은 자연히 나는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우리 김학원의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전시 현재 직원 세 사람이

미국에 장기유학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편지도 받고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수한 직원들을 해외에 2~3년 연구를 시켜 가지고 다시 귀청시켜서 복무를 시키는 방법 또 이제 시정연구단 전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전원 재가 하나도 재기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전문화시대에 우리 김의원 지적한 대로 전문인력시에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인재를 찾는다고 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 가지고 현재 아마 원서가 접수중에 있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분야, 고급인력, 경영인력 이런 특수인력 분야는 이것은 반드시 공개해서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아서 채용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문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에 전문성 같은 것을 함양하기 위한 자체 보수교육이나 공무원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께서는 대전출신 우수대학 졸업생에게 시비로 해외유학하고 연구직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봐라,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같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전발전연구원 설립에 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대전발전에 초석을 다져나가기 위해서 대전발전연구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와 비슷한 광주시가 한 3년전에

법인으로, 공익법인으로 광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해서 시에서 아마 100억을 출연하고 또 민간인들이 출연해 가지고 200억 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도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저는 아직 여기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몇 개 민간단체들을 한번 규합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의 산·학·연이 같이 연계되는 이런 가칭 대전발전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관계부서에 제가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또 김의원께서는 다양한 주민욕구 수용을 위한 행정의 전문성 확보방안, 지방화 또는 세계화시대에 대한 시장의 「세일즈맨」 변신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시장은 경영인으로서 또는 사업의 판매원으로서의 변신을 지금 막 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더욱 활동의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의원님께서서는 호남고속철도의 대전경유를 관철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1호선 계획을 변경해서 박정자 구간까지 연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폈으면 어떻겠느냐, 역시 동감입니다.

앞으로 박정자나 공암이나 어디가 역이 된다고 할 때는 어차피 환승체계가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계속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발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향후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

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언제까지 연결한다고 하는 말씀은 재정계획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만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대단히 미진하고 또 어느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알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곡으로 답변을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바로 이어서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의지는 지금 다섯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분과 똑같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대전을 이끌어 나가는 시장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제 답변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시간이 넘도록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말하자면 실·국장에게 일임한 부분이 있는데,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에 또 의원님들도 그 동안 또 답변을 청취하신 것도 정리도 할 겸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계실·국장답변

○議長 李起雄 그림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장 여러분이 답변을 하는 것은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을 하는 것인 만큼 추호도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실·국장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이원옥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자금이 많이 있는데도 이율이 높은 시중 은행에서 기채를 하는 이유와 녹지기금, 지역개발기금을 기준으로 적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기금 조성액은 898억원으로써 이 중에서 상수도 사업에 60억원, 택지개발사업에 200억원, 청소사업에 156억원 등 416억원을 용자했습니다.

또한, 공채상환금으로 162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20억원을 공기업법에 의한 감채 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용자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금이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지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기준으로 적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 고용재원이 절대 부족해서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기채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개발사업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조례에 규정된 기준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 관리는 현재 대부분 설치된 지가 일천해서 예치단계에 있어 앞으로 목적 사업에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예치자금의 수익성을 감안해서 집중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원옥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의 정비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그간 상위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계속 정비해 왔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조례 제정 12건, 개정 52건, 폐지 10건 등 총 74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있습디다만, 분야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계속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관련 법령의 개정도 적극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이원옥의원께서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이원옥의원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건립 상황과 장애인 활동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스포츠에 의한 사회참여를 위해 건립중인 장애인 종합체육관은 대덕구 대화동에 대지 918평, 연건평 1,367평 규모로 총 48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수영장, 유도장, 탁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97년 완공을 목표로 삼부토건과 태웅실업이 공동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은 현재 10%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에서 건립중인 서구 건강체력관은 서구 둔산동 구청 청사부지내에 건평866평 규모로 '95년 9월 6일 기공하여 '96년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완공되면 여러 가지 장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전시 장애인 복지수준은 한 차원 상승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관공서와 시내 공중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시산하 기관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해당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장·단기를 나누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건축물 설계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중앙 지하상가 리프트카 시설은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진유통관리사무실에서 책임 관리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호입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시장께서 일부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과학산업단지의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학산업단지내에 토지이용계획은 공장 용지가 73만평으로 한 57%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용지가 9만 3,000평으로 7.2%, 상업용지가 2만 1,000평으로 1.6%, 기타 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과학산업단지내의 입지적 위치로 볼 때 과학산업단지내의 주거 상업 기능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신탄진 등 북부권 일대의 도시생활 수요를 분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특히 대기업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높은 분양가입니다.

이의 하향조정을 위해서 토지이용의 변경이 부득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광주의 경우에도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 첨단 공단 토지 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주에서는 1단계 개발 면적이 298만평입니다.

그중 공장 용지가 61만 2,000평으로 20.6%

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주거상업용지는 공장용지보다도 면적이 많은 81만 4,000평으로 27.4%로써 주거상업용지의 분양 대금으로 공장용지 분양가를 하향 조정시켜서 평당 공장용지 분양가가 29만원 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과학산업단지의 기본 취지는 어긋나지 않는 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면서 필요시에는 단계별 개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등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걱정해서 지난 9월에 중앙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26일 홍재형 부총리께서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신 바가 있고 실무적으로 재정경제원세제국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첨단과학산업단지내의 토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적용이 되어서 그런 어려운 점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물가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저희 제2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2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용 능력이 566톤인데 반해서 실제로 하루에 평균 거래량이 766톤으로써 200톤 이상이 초과 부과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대 대전시민의 인구가 165만 명으로 증가될 경우를 대비해서 유성구 노은동 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 4만 8,000평, 건물 1만 4,0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다소 택지개발 사업과 연관이 돼서 조정될 가격과 연관돼서 면적 자체는 다소 줄어든 전망이 있습니다만, 국비 210억원, 시비 49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예산으로 '98년 상반기 개장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10월 농림수산부의 도매시장 건설 사업부로 확정이 돼서 '96년 사업예산을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및 기채 승인을 신청하여 내무부와 농림수산부로부터 '96년도 농한기금 73억 5,000만원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농한기금은 연리가 3%이고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현재 전문유통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운영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6년 4월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 및 '97년에는 착공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대한 계획도 현재 농협과 협조해서 저희 지역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개선을 위해서 다단계의 다각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연구단지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구단지와 기존 대전시민과의 일체성을 조성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연구단지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정기화해서 실시하고 계시고 또 연구단지와 저희 지역 경제계간에 기술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벌여서 3차년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에 걸쳐서 충남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과학기술원 이런 4개 대학이 참여해서 106개 업체가 참여해서 80개의 연구과제를 놓고 기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고 또한 과기처에서는 기술무상양여사업을 '93년부터 지금 저희 관내의 기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개 업체가 완료했고 8개 업체가 연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관계의 자문 교수들을 구성을 해서 저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연구단지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한 시정을 위한 과학기술 자문교수단을 운영해서 시정에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에 있고 특별히 연구단지에서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단지 고급 두뇌를 활용해서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전자금 등의 자금 지원을 하고 판로 개척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한발경제대상같은 부분에도 연구단지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상 분야를 신

설해 주므로써 연구단지 연구원들의 창업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병찬의원님께서 저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농촌 여건은 농가가 8,800가구에 시 총 인구의 2.7%인 3만 3,17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7,747헥타르로써 시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대부분 개발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의 혜택이 없는 열악한 여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WTO의 출범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93년부터 '97년도까지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수산물 유통 및 생활 환경 개선사업 등 48개 사업에 총 87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95년도 정부의 농어촌 발전 계획과 연계 통합하므로써 농업구조개선사업, 농축산물 생산유통구조개선사업 등 총 292개 사업에 1,229억원 내용은 국비가 505억원, 지방비가 724억원이 되겠습니다.

1,229억원을 확대투자해서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이라든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농업 기계와 농기계 반값 공급, 농수산물 규격 출하사업, 농민 현장 애로 기술 개발 사업, 또 1지역 1명품 육성 등으로 농촌발전계획이 완료되는 '98년도까지는 WTO체제에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농촌의 구조적인 기반 시설이 정비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간접적

인 지원으로써 '92년도부터 지금 계시는 홍선기 시장님께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대전직할시에 편입되므로써 많이 혜택이 줄어든 편입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자녀들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억 7,000여 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지원 결과 그 당시의 기준이 경지의 면적이 0.5헥타르 미만으로 돼 있고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농촌지역에는 1헥타르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대상의 면적을 넓혀서 더 많은 농어민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과도 협의를 해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융자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임을 더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문화관광국장 노병찬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이원욱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유치 시의 수지계산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잘 아시는 대로 내년 6월에 월드컵 유치 국가가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개최도시가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서 세부경기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상세한 수지계산을 보고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출면에서는 최소 4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장의 신축이나 증축에 소요되는 경

비가 가장 커다란 지출요인입니다.

이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월드컵유치가 확정된 후에 협의키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익면에 있어서는 먼저 입장수입액의 일정비율이 경기장 사용료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미국 월드컵에서는 입장수입액의 약 25%가 개최지에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경제에 주는 간접 수입도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약 3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월드컵 개최도시로써의 자긍심과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무형적인 효과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지계산은 앞으로 수립될 구체적인 월드컵 개최 계획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향후 보다 진전된 수지분석을 해가면서 지역적 이익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이병찬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대전시 면적의 60%에 가까운 316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관계 법규가 현 시대적으로 상황에 걸맞도록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에 건의 및 관철할 용의가 있느냐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3년 6월 27일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것입니다.

저희 시는 행정구역 면적의 59%에 해당하는 316.82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은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정된 것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3년 5월에는 전국 개발제한구역을 정밀 재조사하였고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년 12월 31일 행위제한에 관련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됨으로써 많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해소된 바 있습니다.

그 완화된 내용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유소의 신축허용, 주택 및 축사의 증축 확대, 타인 대지상에 주택 이축, 농지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변경허용 등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동감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수차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규제완화를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으로써 주민불편사항과 또 지적된 사항 관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으로 올립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鎮洙 환경녹지국장 신

진수입니다.

이원옥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 사항 열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옥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1·2공업단지의 경우 공업단지 조성 초기에는 우리 시의 외곽지역으로 공해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었습니다.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확장으로 현 공단지역이 시 중심지로 변모되면서 공해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공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지역의 경우 100여 개소의 공단 공해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원이 복잡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에서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업소에서도 방지시설 교체와 신기술 도입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비 투자를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원에 대한 공해방지를 위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확대하여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산업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일
일 100톤 정도이고 그중 특정 폐기물이
70톤 정도입니다.

원래 산업폐기물은 특정폐기물과 일반폐
기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으로써 특정폐기물은 지방환경청에서 관
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보유시설은 소각장 두 개, 매립장 한 개
소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
리시설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중부권 특정폐기물 매립
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지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 반대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정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
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폐기물도 금고동 장기매
립장이 조성되면은 일반 반입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성구 구민운동장 침출수 문제
해결 방안과 용담댐 및 옥천쓰레기 매립
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유성구 구민운동장의 침
출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면 유성구민 운동장 부지에 매립된 쓰
레기는 당초 갑천과 유성천 합류지점인
하천 부지에 '89년 8월부터 11월까지 13만
㎡를 단순매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엑스포」 '93하천정비 사
업의 일환으로 합류지점에서 매립된 쓰레
기를 현 구민운동장에 이전 매립하였습니
다.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바닥에
차수시트를 깔고 침출수 또한 처리를 위
해서 직경 300mm관로를 하수차집관거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에 대한 오염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침출수는 쓰레기 매립 후에 1, 2년 동안
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5년 이상 경과되
면 사실상 쓰레기가 안정화되어서 침출수
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과 옥천쓰레기 매립
장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책은 김성구의원
께서도 질문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앞
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대신하
고 옥천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1,300여평에
조성 중인 옥천군 쓰레기 매립장은 '96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매립시설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 후 침출수 전량을 옥천하수처리장
으로 이송처리할 계획으로 대청호 수질에
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공불량 또는 운영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공단 지역내에 을미기 방죽에 30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한 바 있는데 이 쓰레기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공단 내에 을미기 방죽 매립지는 1987년에서 '89년까지 과거 충청남도 대덕군에서 사용한 것으로 현재에는 제4공단 조성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을미기 방죽내에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95년 11월 6일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매립지 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정시설을 설치하고 공단 내에 분산되어 있는, 분산되어 조성계획인 공원을 동매립지로 집중시켜서 주민 편의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공단근로자와 인근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님께서 금고동 쓰레기 장기매립, 위생매립장 운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조금 하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 125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사항으로써 지난 '94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96년 상반기까지 일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입니다.

먼저,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설치 운영 문제는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별도 경영 분석을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차기매립장 조성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매립 비용을

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위생매립장 매립기간 연장을 위해서 현재 건설 중인 400톤 규모의 소각장외에 가연성 쓰레기 전량을 소각할 수 있는 자체 소각시설을 단계별로 건설하고 대형쓰레기의 파쇄시설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을 더욱 확충해서 장기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행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정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시범기간중 제작된 종량제의 규격봉투는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한국단체표준규격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사용시 잘 찢어진다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20리터들이 봉투의 경우는 0.018mm로 제작하던 것을 0.025mm로 강도를 높여서 제작함으로써 봉투의 재질문제는 해소됐습니다.

무조건 강도를 높여 제작하는 것은 또 분해기간의 연장을 초래하고 매립장 조기 안정화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단체표준규격의 강도를 알맞게 높이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조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가 투명해서 사생활침해 및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환경부의 기본안이 내용물이 잘 보이도록 투명한 흰색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제작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가 대부분 투명한 흰색을 그대로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환경관련단체, 시민, 주부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일반용은 내용물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연녹색으로 하고 공공용은 연청색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오염의 유발이 우려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비닐은 썩는 것이 아니라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비닐봉투는 대덕구만이 분해성 물질을 4%를 첨가해서 제작하고 기타 4개 구는 일반 비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 비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분해가 됩니다. 분해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라는 분해성 비닐의 개발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일반 비닐의 분해성 물질인 전분이나 지방을 9%범위내에서 혼합해서 제작 가능합니다라는 20%정도의 제작비 상승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됩니다라는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가능한한 '96년도부터는 분해성 물질을 첨가한 비닐로 제작토록 각 구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 않아서 한달 이상씩 공터에 쌓아놓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장비, 인력, 시설이 모두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기에 운반하지 못한 사례도 일부지역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37% 정도가 감량됨에 따라서 21대의 청소차와 72명의 청소수거 인력을 재활용품수집 운반장비로 전환하고 각 구청에서 1개소씩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선별 창고를 확보해서 총 71대의 차량과 2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수집 운반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재생처리공장도 환경부에 건의해서 패트병류등 재생시설을 확보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구별로 요일별 장소별로 수거 일정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재활용성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함으로써 토양공해를 유발하는데 대한 대책과 조대쓰레기의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박행자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재활용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는 재활용성과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류되지만 재활용성은 가능한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고 폐비닐, 과자봉지 등 재활용하지 못하는 가연성쓰레기는 소각함으로써 매립량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는 신대동에 1일 100톤 규모의 가연성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능력밖에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소각되고 나머지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월 15일 착공한 제4공단 내에 1일 400톤 규모 처리능력의 소각시설이 완공되는 '98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가연성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해서 쓰레기의 최소량만을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대쓰레기의 불법배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시민들이 배출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처리체계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3회 방문해서 처리하던 것을 1회 방문 처리로 개선되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할 것이며 또한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개발 침체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원 조성은 183개소에 366만 5,000평으로 전체 면적대비 32%를 조성 완료하여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의 공원조성률은 25%보다는 다소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이거나 미조성한 공원이 21개소에 780만여 평으로 있습니다. 이중 사유토지가 70%가 있습니다. 547만평인 바 이에 대한 토지보상비만 해도 9,00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보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공원시설 투자비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원개발이 부진하였음을 공감합니다.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원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비 투자는 물론 민간자본 유치를 병행해서 시설지구내의 사유토지부터 선보상후에 개발방식으로 공원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세천공원의 관리이관에 대한 견해는 동 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근본적으로 자연경관 훼손의

억제와 수질오염원을 차단하는 관계로 공원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원 일대가 원시림의 경관이 극히 양호하고 생태계가 가장 다양한 지역임을 감안해서 자연환경보전림으로 지정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쾡이라든가 멧돼지 멧토끼, 다람쥐 등 야생 조수를 방사하고 먹이식물 등을 증식함은 물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시민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존해서 태고의 신비가 서린 유일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확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녹지기금은 도심내의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학교 등이 교외로 이전할 경우에 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막대한 재원을 일시적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소요재원을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92년 9월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목표는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2,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시분청 52억원, 5개 구청에 23억원을 모아서 현재 75억원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기금이 조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93 「엑스포」와 체전 준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투자등 열악한 재정의 여건이 주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수금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 기금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나 시민 성금외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중앙에 납부되는 산림전용부담금이나 대체조림비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일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여 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나 건축허가 시에 의무조경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대체조경부담금제를 신설하는 등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 조성에 필요한 신재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녹지기금의 특별재원이 목표달성에 일부 미치지 못하여도 공원 조성에 적합한 부지가 발생할 경우에 의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적립된 기금 외에 부족재원을 당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본래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이원욱의원, 김성구의원, 김학원의원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욱의원님과 김성구의원 두 분께서는 둔산지구 정부종합청사, 시청사 등 대형건물 완공시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대책과 천변 고속화도로와의 연계체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둔산지구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 내년에 교통연구실을 설치하여 중장기

교통정책 개발과 교통체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 전문연구실이 설치되면은 우선적으로 둔산지구에 대하여 과업을 부여하여 면밀한 현황 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청회등 시민의견수렴을 거쳐 교통난 해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인 둔산지구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시청사, 정부종합청사 등 둔산지구 중심지를 통과하게 되고 순환노선인 2호선과 4호선도 경유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은 노면교통을 대폭 수용하게 됨으로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천변 고속도로 둔산지구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만년교, 갑천대교, 한밭대교, 대덕대교, 둔산대교 등 5개소의 평면 및 입체교차시설로 천변 고속도로와 둔산지구의 교통편이 연계체계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원의원께서 대형건물 및 공공시설물 설계시 내진설계 도입방안과 계룡육교 확장을 수침교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확장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형건물의 내진설계 도입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그리고 지난 6월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그 동안 크고 작은 대형사고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진의 대비책에 대하여 최근에 각종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다마는 우리나라의 지질 및 지정학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88년에서부터 6층 이상, 3만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에 내진설계규정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각종 대형사고의 빈발에 따라 본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내년부터는 6층 이상 연면적 3,000평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인 교량 육교등에 대해서도 새로이 신설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시방서에 따라서 설계발주에서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이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대전에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수침교개량과 계룡육교확장 병행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침교와 계룡육교 서대전육교는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안전 교량으로 판정되어 저희시에서는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반영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침교는 폭 35m중 중앙부 19m를 개량코저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계룡육교는 폭 18m 4차선을 24m 6차선으로써 전면 개량 확장코저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96년도 3월에는 설계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대전육교는 '96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병목현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침교개량과 계룡육교 확장을 병행하여 추진할 시는 약 600

m정도의 임시가교를 설치 서행하여야 하고 인접지에 도시 철도를 '96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있어 병행하여 동시 추진을 하면은 공사기간동안 상당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교통처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수침교, 계룡육교 도시철도의 동시 추진시 서로 공사기간이 상이하고 교통의 흐름 연차별 사업비등을 종합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실·국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과 또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3. 시정에관한보충질문(이원옥,김성구, 이병찬)

○議長 李起雄 질문하신 의원께서 답변내용중에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요점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의 순서는 앞서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옥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議員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실력으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과 방청객 모두에게 후련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좀 답답

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요지에서 시민과 의원들은 시장님께서 내세운 대전의 이상과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간에는 큰 격차가 마치 신기루의 행정 속에 살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되시겠습니다.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비전과 모든 이상이 하급공무원까지 완전히 침투돼서 그것이 전부가 「비즈니스」 행정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나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한 6대 특화작목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실·국장들에게 부탁드리고 열린 행정을 위한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또 우리 고유의 일류상품 개발품목과 향후 국제화 전략도 빠진 걸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천변고속도로 서부 간선도로 지역별 순환도로 건설을 위한 교통난 해소만 얘기했지 재원대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재원대책을 밝혀주시고 둔산 신도심의 지하도 건설의 개요와 예상수입을 확실히 밝혀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도시공원 조성계획과 보문산 수종갱신의 내용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만이 유일하게 추진할 특수 복지 행정도 특수복지 시책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한번 밝혀드릴까 합니다.

이건 중요한 건데요 4공단과 첨단과학산

업단지에 투자된 투자비를 계획연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고 총 투자 사업비에 대한 공단조성투자비가 차지한 비율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10월 28일 현안사업보고에서 밝혔었는데 이게 지금 공단용지 분양가를 낮추고 토지계획이용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분양가가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를 예측하셨으면 이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전에 대덕연구단지라는 최첨단 과학의 「메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지 못한 뼈아픔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광주는 우리 대전과 비교하여 여건도 제대로 못 갖춘 광주가 국가공단으로 지정됨으로써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1,194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보조를 받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대전은 자체예산 13억원의 용역비만 투입해 놓고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광주는 대기업유치를 위해 공단 부지가격을 50%나 인하해 주면서 공단유치단을 서울에 상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議員 김성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심도있게 질문한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 피해 극소화 방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만은 아직도 홍선기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근본

적인 문제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용담댐건설 문제는 역대시장님들께서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접근하려는 의지가 그 동안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처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전문가들께서는 대전시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전주권 용수확보를 빌미로 135만톤을 전주권으로 돌리면서 실상 전주권으로는 1일 30만톤만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1일 백만톤이라는 엄청난 물을 만경강으로 그냥 흘려 보낸다는 댐 건설의 허구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전기발전의 이익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질의는 용담댐 건설을 취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초당 5톤을 방류할 계획을 설계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초당 5톤 방류로는 머지 않은 장래에 먹을 물이 송두리째 없어질 위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큰일납니다.

본 의원은 초당 방류량을 좀더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대전에서는 정부요로에 여태껏 단 2회의 협조요청만 했습니다.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 5월에 회신 온 것을 보면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추진한다는 답변서를 받았 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민의 그 바라는 여망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방안이 없는 현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문제는 대전에 존재 문제가 달린 심각한 문제로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대전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시장께서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셨다면 시정질문이 끝난 이후 좀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셔서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장 직속으로 한시기구라도 설치를 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표명이라도 더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농촌에서도 가뭄이 오면은 개 인간에도 물꼬 싸움이 대단합니다. 하물며 125만 대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셔야 할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좀더 강력한 의지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행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이병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議員 이병찬의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시장님 관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정치는, 행정은 그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국민의 미래를 열고 희망을 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정치 서비스를 겸한 행정이라면 그것이 제일 잘하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저는 고향이 유성인지라 우리 대전의 6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전 그린벨트를 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저해하는, 내가 사는 집 또 내가 사는 집 옆의 땅이 그린벨트로 묶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10부 능선으로 되어있을 때 그것을 10부 능선까지 다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동네와 산의 중간 6부 능선까지만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맨처음에 설정할 때 정부에서는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하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의 인구와 20년 전의 국민의 문화정책과 지금은 판연히 다르고 있습니다. 아까 농업정책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3,000세대에 3만 3,000명의 농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법만 개정하면은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에 ‘현안사업을 많이 함에 있어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현안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는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20년 동안 진행되어온 법의 일부분을 차단이 아니라 개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작년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액의 35%만 자급자족이고 65%를 수입을 해 왔습니다.

농업국이고 이런 나라에서 농산물을 65% 수입을 했다는 것은 농촌정책의 잘못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개축 내지 증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평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형제를 둔, 우리 서민적으로 피부에 닿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손자를 조카를 동생을 결혼을 시켜서 시내로 셋방을 얻어서 내 보냅니다.

왜? 그린벨트에는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있는 집터에만 개축허가가 나고. 그러나 집이 없으니까 시내로 와서 농사를 지러다니다가 공장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농촌인구의 감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농촌 실정에 노동력도 없고 재원도 없고 이 원인의 하나가 동네 텃밭에 건축허가가 안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국장께서는 60%의 그린벨트 안에 동네가 깔고 앉은 건축물이 들어 있는 곳의 「프로테이지」는 몇 「퍼센트」되는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꼭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산발적으로 풀어 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議員 의석에서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관계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충질문에대한답변

가. 대전광역시장(홍선기)

○議長 李起雄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洪善基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민대표들이 모여서 대전시정의 오늘과 내일을 같이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또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성의있게 답변을 하느라고 했지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이원옥 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 또는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답변을 하고 실무적인 분야는 관계국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밝힌 시정의 소신과 방향이 마치 신기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시장의 행정의지나 철학에 대해서 미처 못 깨닫거나 실천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불과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5개월입니다.

그 동안 저 자신의 변화를 비롯해서 내 변한 모습이 우리 직원들한테 투영이 되고 또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바탕위에서 질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오랜 조직관리를 해본 경험에서 우리나라 교훈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제 행정의지나 철학을 또 주요 시정에 대한 의지를 우리 공직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좌담회 또는 계층별 대담 또 공무원 교육등을 통해서 여러차례 밝혔지만은 지금 이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일선 공무원들 또는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 뜻과

전혀 상치되는 반대의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아직도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 불만족스럽다라고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6,000여 시청 공무원들은 많은 노력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도 있으리라고 보지만은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새로운 자치시대의 변화하는 행정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여 아직도 시장의 행정철학이나 의지가 우리 산하 공무원들에게 침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교육과 또는 각종 강론을 통해서 제 뜻이 빠른 시일안에 이해가 되고 또 수용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열린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나?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의 추진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개하기 이전까지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밑실에서 또는 한정된 사람들이 입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계획은 하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토론을 거쳐서 양해를 거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을 거쳐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행정의 절차입니다.

저는 맨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 시책 추진과정이 공개되고 투명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영업시간의 조정문제라든지 또는 영업허가 제한고시를 이번에 풀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시책의 변화를 결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개된 여론도 수렴했고 간담회

도 해 봤고 또 직접 제가 나가서 TV에 토론도 해 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시민의견을 듣고 또 이쪽에 의견도 알리고 그래서 타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결정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는, 일반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의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있으나 대전시에는 13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행정의 소외된 분들, 알기 어려운 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피했던 그런 소외계층들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시청에 소집을 해서 시정의 현장을 알려주고 돌아 와서는 소감을 같이 듣고 토론하는 시정 설명회 제도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제가 듣지 못하는 얘기들을 듣고 시청에 반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신문고도 지난 7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기자실에 매월 정기적으로 시청에 대한 「브리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PC 통신을 위한 홍보와 여론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시책들이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국제화 시책 또 일류상품 개발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는 바로 일류화를 뜻합니다.

그 일류화가 저희 고장의 경우는 특화된 상품도 없고 또 특화된, 전업화된 그러한 업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전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전에 어떤 산업을 특화시킬 것이냐? 그 동안 피혁공업을 또 타올공업을 예를 들어서 권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되 앞으로 21세기의 경제성이 밝은 시장성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이러한 산업중, 대전의 「테크노 크라스」들 많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대전에 어떤 산업을 하나 특화시켜서 그 산업을 일류화시킴으로써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 나가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시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의식의 선진화 국제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로 국제화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문화가 국제화되지 못하면은 그것은 국제화가 아닙니다.

대학을 나오고도 입국수속을 하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제화가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기초외국어 교육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삽입을 시켜서 계속해서 국제화의 전제가 되는 외국어에 대한 기초소양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우수한 공무원들은 해외로 적극 파견해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을 섭렵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 사람이 현지에 나가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부터 의식의 국제화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외교사절을 더욱 확대하고 이 분들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대전의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기존의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이들 도시와 문물의 교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상호 이해가 되는 바탕위에서 문화의 교류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의 도입까지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의식과 문물의 교류와 해외의 거점의 활용 또 실질적인 교역의 확대, 자금의 유입과 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성구의원께서 전문적인 자료와 심도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청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용담댐이 건설이 되고 보면 대청댐은 근본적으로 댐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대전시민들의 상수도원은 용수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대단히 충정어린 말씀을 해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대전시민 130만의 물문제, 생활문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의지가 약하고 관심이 적겠습니까? 저는 3년 전부터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수를 이 자리에서 들

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로 인식의 차이도 있고 그러나 이 용담댐과 대청호의 관계는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대청호를 보호하고 필요한 때의 적정한 수량을 공급받아서 식용수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안에도 비공식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서로 이 문제 가지고 협조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해당국에다가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검토와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끝으로 이병찬의원께서 그린벨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도 바로 그린벨트 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사시는 많은 분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재산권의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 의원께서 실감나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제기가 되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지방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 측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반시민들 또 영세한 분들 아까 우리 이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때그때 마다 우리가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은 전에 비하면 많은 규제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량한 우리 영세 시민들 그

린벨트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잘 압니다.

이 문제도 우리 시에서 관계국으로 하여금 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현장의 답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정책건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 린벨트가 제대로 보존이 되면서 농민들의 권익도 생활의 불편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이원옥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에서 우리지역만이 유일하게 추진하거나 추진할 특수복지시책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한 복지시책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복지 문제는 재정상 국가가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러한 시책을 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특수복지 시책은 일반시민의 건강을 위한 위암 이동검진센터 운영과 노인들의 독감 예방을 위한 「인프랜자」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인의 종합복지시설인 「실버토피아」 건설과 모자세대의 자녀학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 모자세대의 자활을 위한 모자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녀를 둔 주부들의 취업편의를 위해서 지역별로 탁아방을 설치하고 장애인의 취업촉진을 위한 장애인 직업훈련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사랑나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발굴하면서 시민의 욕구충족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이원옥의원님께서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과 또 4공단과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비 내역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6대 특화 작목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근교농업육성을 위한 6대 작목은 시설포도단지 조성, 고품질 배생산, 시설채소 재배 확대, 화훼 산업육성 버섯재배협업 경영과 지역여건에 맞는 축산지도 등 도시근교농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시설의 현대화, 품종경신, 직판장확대, 오수처리 시설 보급, 재배기술의 과학화, 협업농업경영 등에 '95년도에 우선 9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2004년까지 381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건설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계약거래에 의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 근교농업에 대한 육성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공단과 과학산업단지 등 투자비 연도별 내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공단과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업체의 선수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95년 10월 31일 현재 수입과 지출과 잔액을 누계별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공단의 수입은 1,950억 8,829만 9,000원 이제 지출은 1,925억 4,0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5억 4,8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대개 수입의 재원인 선수금과 일반회계 지원금 기채 일시 차액이자 등이 되겠고요. 지출은 사업비와 전용금 기채상환, 이자,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4공단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시비가 432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4년에 70억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일반회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관계는 아직까지 사업이 정치적으로 개시가 되지 않은 관계로 그간 용역비 13억 5,000이 투자가 되었고요.

연도별로도 시비 지원등을 고려해서 463억원의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9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금으로 해서 금년에 60억의 금병로확장 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신탄진 IC와 갑천교 건설로 관계되는 155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광주에 대한 것을 참고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93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가 176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건교부에 지난번에 국가공단지정을 위한 재건의를 했을 적에 건교부의 회신이 국가공단에 준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국비 지원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되어서 검토된 것이 어느 정도 선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목표치를 두고서 가격의 목표치를 두고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또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토지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만 바람직하기로써는 50만원 대를 넘지 않기를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당 55만 1,000원 입니다만 매우 높은 가격으로 대기업들에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를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토지분양가를 낮추기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지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들어가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이원욱의원님께서 둔산 신도시에 지하도시 건설 개요와 예상 수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필요성과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저희 시청사가 둔산으로 준공

이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3청사도 준공이 되어서 정부의 기관이 입주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해서 기존 구 도심에 있는 여러 가지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광역 청단위의 공공기관과 공공 업무기관이 둔산으로 거의 입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도시지하철도 1호선이 판암동에서 대전역을 경유해서 서대전, 둔산 도심을 통과해서 외삼까지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검토를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둔산동은 아시다시피 행정업무기능이 집단화된 그런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이 전부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이 둔산동에 시청을 방문했을 때 그 외에 타 공공기관 간에도 연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시청에 한번 출입을 해서 거기에서 자동차 「파킹」을 해 놓았을 경우에 교육청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를 도보로 전부다 움직여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지하도로망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 시청에 와서 불일을 보고 또 차를 몰고 교육청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러한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하공간을 최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각종 청사 내지는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런 지하 보행 통로와 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만남의 광장 등 문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하겠다 또 근린생활 기능을 그 지역마다 집어 넣어야 되겠다 또 대규모 주차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배경과 아울러서 유사시에 저희들이 지하 대피시설로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검토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민자 투자 또는 시자체 경영 수익사업으로써도 저희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선 당장은 바로 수익이 없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행정 업무 서비스 기능이 집단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틀림없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민자 투자 사업에 효율이 크지 않겠느냐? 또 타 도시 거의 큰 도시에는 지하 그런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보행자 공간내지는 공원시설이 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전부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그런 좋은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큰 배경은 어차피 지하철이 저희 신청사와 3청사 또 3청사 옆에서 고속 내지는 일반 버스 터미널이 입주하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시민들이 그런 공공기관내지는 이런 터미널 이런 것을 이용할 것이다 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청에서 제3청사 간 약 1.6km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근린 공원과 보행자 전용도로가 상당히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4만 5,000평의 해당하는 면적을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노선은 대덕대로가 되겠습니다.

둔산 동양백화점 주변에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그 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하보행 통로를 확보해야 하겠다, 연장은 1.2km, 폭이

40m, 면적이 약 1만 4,500평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은 큰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저희들이 그 건물 건축과 동시에 그 건물에 연결하는 지하 보행통로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런 통로와 연결되는 그런 큰 공공기관은 열한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희망하는 그런 업무 내지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은 명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97년에서부터 즉 2005년까지 전부다 완료하는 걸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익금에 대해서 얼마가 예상이 되느냐, 이익금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명년도에 기본방향을 설정을 해서 한발개발공사나 아니면 민자유치 그런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전에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개발제한구역 구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의 각 시·도의 행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분포 비율은 부산이 약 79.7%입니다.

부산시가 이번에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많은 면적이 즉 양산군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약 79.7%, 대구가 60.6%, 광주가 55.2% 저희 시가 약 59% 정도 됩니다마는 서울, 인천은 행정구역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면적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은 당초에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지정이 됐었어야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 관계 공무원들의 무지 내지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놓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논고랑을 사이에 두고 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한 지역은 개발제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그런 토지소유자의 손해는 상당히 많다. 토지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건교부에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등 그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구역을 재조정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서를 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좀 완화가 많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9일에는 도시계획법 내지는 도시계획법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건교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으로서는 저를 비롯한 타 광역시 한 국장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가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또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일응은 저희들이 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起雄 실·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鎮洙 환경녹지국장 신진수입니다.

먼저 이원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민도시공원의 조성계획과 보문산 수종갱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은 총 198개소 1,147만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조성한 공원은 183개소에 366만 5,000평을 조성했습니다.

공원은 그 규모가 비교적 작은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이 대부분이고 규모가 크거나 교외지역 공원은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월평 천변공원, 유등천변공원 등은 천변 고속화도로 계획등 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천공원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문산 가양공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보문산공원의 수종갱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오리나무, 현사시 등 불량 임목을 제거하고 잣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상수리나무 등 경관수를 중심으로 특색있게 조림을 실시하고 비료주기, 가지치기, 칩덩쿨을 제거하는 등 나무를 정성껏 가꾸어서 사랑받는 공원의 환경림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김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지를 발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에 미치는 영향은 '94년 12월 발표된 지역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대청호 수량이 23%감소되고 부영양화 현상은 22% 증가된다고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량 감소는 저희가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댐물은 평소에 흐르는 강물에 의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비에 의한 빗물에 의해서 저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관계 기관에 수질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3차에 걸쳐서 건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요청이 됐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량 및 수질문제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1일 100만톤 규모의 비상방류수로를 설치계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완공 이전에 대청댐과 용담댐간의 가장 적합한 운영 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용담댐 건설에 따라서 대청호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은 대청호에서 지금 우리 시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총 용수계획의 5.6%에 불과합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합쳐서 전 용수계획의 23.52%가 생활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용수 부족에는 절대 용수 공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수가 부족할 시에는 일반 용수를 제한을

하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하고 우선 생활용수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그렇게 생활용수 공급에는 절대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성구의원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절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심각한 형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이원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의 재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시교통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자 천변고속화도로를 비롯하여서 동부,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시설확충을 위한 중기투자재정 계획을 수립하여서 연차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투자돼야할 사업비는 약 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선 천변고속화도로 계획 노선 중 갑천은 가수원교에서 만년교 간 5.2km, 유등천은 도마교에서 한밭대교 간 5.5km에 대해서 민자유치등 유료화 도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덕연구단지 내의 금병로 확장은 국비 60억원의 지원을 받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1호선 조치원선, 국도 17호선 금산선 등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서 시행하는 등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답변으로 말씀하겠습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의 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出席議員 25人

○不參議員

李善鍾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大田廣域市長

行政副市長

政務副市長

企劃管理室長

監查室長

內務局長

財務局長

保健社會局長

家庭福祉局長

地域經濟局長

文化觀光局長

都市計劃局長

環境綠地局長

建設交通局長

公報官

洪善基

鄭夏容

曹俊鎬

權善宅

李康鎬

李初榮

裴聖浩

林榮鎬

李文玉

朴城孝

盧炳燦

金正旭

申鎮洙

鄭範基

金鍾洙

消防本部長	金永元
公務員教育院長	賈基山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市立燕亭國樂研究院長	李雨錫
女性會館長	吳英子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教育廳)

教育監	朴景源
副教育監	金相殷
初等教育局長	林元圭
中等教育局長	金星泰
管理局長	朴在熙